

시·군종합감사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4·5급 승진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7
2)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16
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23
4) 구조안전기준 미달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28
5) ○○면 ○○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32
6)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부적정	37
7)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42
8)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49
9) 전기사업 및 전기설비 관리업무 부적정	52
10) 농지처분명령 취소 절차 등 업무처리 부적정	58
11) 액화석유가스사업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처리 부적정	66
12) 굴폐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	70

13)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75
14)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	81
15) 수의계약이 제한된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86
16) ○○○○○ 육성 지원 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92
17)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 실시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03
18)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료 징수 등 소홀	109
19) ○○○○ 연안정비사업 보험정산 및 설계변경 검토 등 부적정 ..	116
20) 산림사업 하자검사 부적정 및 안전관리계획 누락 등	121
21) 직장 동호회 및 상조회 운영 회계처리 절차 등 부적정	127
22) 지방세 감면 부적정 및 부과 누락	136
23)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보험료 미부과 등 부적정	145
24)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	152
25)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	171
26) 토석발생 공사현장 축증기, 토석정보, 암판정위원회 등 관리감독 부적정	186
27) ○○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설치계획 등 부적정 ...	196
28) ○○○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	200
29) 고성 ○○○○ ○○○시설 건립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208
30) 고성읍 ○○○○○ 개보수사업 설계용역 발주 등 부적정	214
31)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220
32) ○○○○○○○○○○○인프라구축사업 ○○○○건립공사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	22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고성군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성군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전반,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 등 회계 운영 적정성,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처리실태, 주요 투자사업 및 대형공사 추진실태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고성군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지방의회 논의 사항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3. 7.부터 3. 10.까지 4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 3. 14.부터 3. 22.까지 7일간 감사인원 19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3. 22. 고성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5. 30.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고성군은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 최남단에 위치하며, [표 1]과 같이 2023년 6월 기준 인구는 49,857명이고, 면적은 518.00km²이며, 관할 행정구역은 1개 읍, 13개 면이다.

[표 1] 일반현황('23. 6월 기준)

인구(명)			면적(km ²)	행정구역				
계	남	여		읍	면	동	법정	행정리
49,857	25,116	24,741	518.00	1	13	-	119	265

[자료 : 고성군 누리집]

2. 행정조직

고성군의 행정조직은 [표 2]와 같이 본청은 1담당관, 3국, 1추진단, 16과, 소속기관은 2직속기관, 3사업소가 있고, 군의회와 14개 읍면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749명이다.

[표 2] 행정조직현황('23. 6월 기준)

구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담당관	국	추진단	과				
기구	1	3	1	16	2	3	14	1
정원	353				141	41	19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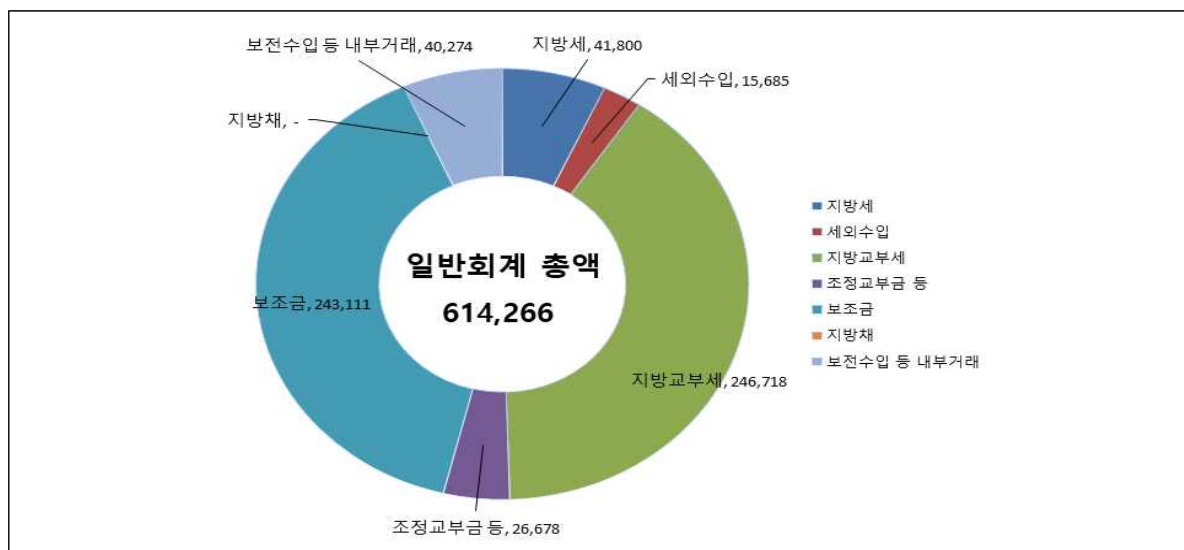
[자료 : 고성군 누리집]

3. 재정 현황

고성군의 20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886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그림 1]과 같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575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5,165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3억 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3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3.87%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자료 : 고성군 누리집 - 2023년 고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4. 주요 현안 사업

체류형 관광객 및 마이스 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2024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도심 속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치되어 있던 옛 공설운동장을 활용, 힐링공원 및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8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백만 원)					
구 분	계	시정	주의	통보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기타
계	88	24	45	17	2	162	2	68	92	1,199	55	843	96	31	174
처분 요구	50	14	23	13	-	162	2	68	92	1,086	53	843	23	30	137
현지 조치	38	10	22	4	2	0	-	-	-	113	2	-	73	1	37

감사결과 확인된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분야

- 4·5급 승진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

회계·세무분야

- 수의계약이 제한된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직장 동호회 및 상조회 운영 회계처리 절차 등 부적정
-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추징 누락

건설분야

-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 ○○○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
- 고성 ○○○○ ○○○시설 건립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기타분야

- 굴폐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 ○○○○○○ 육성 지원 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보험료 미부과 등 부적정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4·5급 승진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대상직렬 결정 및 인사 일정’ 군수의 방침을 받아 승진대상 직렬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인사예고를 한 후 정기인사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결원 과다산정 및 5급 사전 승진의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결원이 발생한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인사를 시행하면서 결원의 산정은 인사요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향후 예상되는 결원을 미리 과다 산정하여 결원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까지 3차례에 걸쳐 6개월 후의 결원 인원을 결원으로 과다 산정하여 [표 1]과 같이 총 9명에 대해 5급 사전승진 의결을 하였고, 승진의결 후 직무대리 등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기존 부서에서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가 차기 인사 시 승진임용 발령하였다.

[표 1] 5급 승진 사전의결 현황

(단위 : 명)

구분	결원현황(6급→5급)		결원 과다산정	사전승진 의결자 (인사위원회 의결일)	비고 (발령일자)
	실제	산정			
2020 하반기 정기인사 (2020.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 3 - 공로연수 : 1 - 명예퇴직 : 1 - 상위승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 6 - 공로연수 : 1 - 명예퇴직 : 1 - 상위승진 : 1 - 12.31. 퇴직예정 결원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급 ○○○ - ○○ 5급 ○○○ - ○○ 5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급 ○○○ - ○○ 6급 ○○○ - ○○ 6급 ○○○ (2020.7.3.) 	2021 상반기 승진발령 (2021.1.1.)
2021 상반기 정기인사 (2021.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 1 - 상위승진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 5 - 상위승진 : 1 - 6.30. 퇴직예정 결원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4급 ○○○ - ○○ 5급 ○○○ - ○○ 5급 ○○○ - ○○ 5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급 ○○○ - ○○ 6급 ○○○ - ○○ 6급 ○○○ - ○○ 6급 ○○○ (2021.1.1.) 	2021 하반기 승진발령 (2021.7.5.)
2021 하반기 정기인사 (2021.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 2 - 12.31. 퇴직예정 결원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급 ○○○ - ○○ 5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급 ○○○ - ○○ 6급 ○○○ (2021.6.25.) 	2022 상반기 승진발령 (2022.1.1.)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4급 승진대상직렬 미결정 및 인사예고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제38조(승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¹⁾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²⁾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임용권자인 군수가 4급 결원에 대한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고 방침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반드시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고성군 인사위원회에서는 대상직렬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자를 사전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1) 4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방서기관, 지방○○서기관으로 직렬을 구분하여 작성

2) 지방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1) 임용권자의 승진대상직렬 미결정 부적정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 6. 19.자 「2020년 하반기 승진대상 직렬 결정 및 인사 일정(안)」 방침을 받으면서 5급에서 4급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인사예고하는 등 [표 2]와 같이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까지 5회에 걸쳐 4급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지 않았고, 인사예고 시에도 3회는 대상 직렬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인사예고를 하였으며, 2회는 승진대상 직렬 표기없이 방침을 받고 대상 직렬을 인사예고 하였다.

[표 2] 4급 승진대상 직렬 미결정 현황

구분	방침 결재일	결원(직급)	승진 직렬	인사예고	인사위원회 의결
2020 하반기 정기인사	2020. 6. 19.	1명(○○4)	1명(미결정)	1명(미결정)	승진대상자 미결정
2020 하반기 정기인사 변경 결정 ³⁾	2020. 6. 22.	1명(○○4)	1명(미결정)	1명(미결정)	
2020 하반기 수시인사	2020. 8. 28.	1명(○○4)	1명(미결정)	1명(미결정)	○○5(○○)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2020. 12. 17.	1명(○○4)	1명(미결정)	1명(기술)	○○5(○○)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2021. 6. 16.	1명(○○4)	1명(미결정)	1명(행정)	○○5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고성군 인사위원회에서는 4급 승진후보자 명부가 ○○직렬과 ○○직렬로 각각 작성되었음에도 승진대상 직렬 미결정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승진심사 대상자가 아닌 두 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4급 승진임용 부적정

특히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2020. 6. 19.) 임용권자가 대상직렬을 결정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를 하나의 직렬만 상정해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3)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여부 논의에 따라 인사발령일이 2020. 7. 1.에서 2020. 7. 8.자로 늦춰짐

[표 3]과 같이 ○○직렬 3명과 ○○직렬 3명을 동시에 제출하였고 승진임용에 하자가 없는 대상자가 4명이나 됨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승진 대상자를 사전 의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가 부당하게 승진의결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4급 승진후보자 현황

후보자명부	순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인사위원회 미의결 사유
			현 직급	현직급 승진	
지방서기관	1	○○○ (○○.○○.○.)	○○ 5급	2015.4.11	퇴직 잔여기간 6개월
	2	○○○ (○○.○.○.)	○○ 5급	2015.9.21	○○년생으로 ○○자리 오래 근무
	3	○○ (○○.○.○○.)	○○ 5급	2013.7.1.	징계 요구 중
지방○○ 서기관	1	○○○ (○○.○○.○○.)	○○(○○) 5급	2013.9.30.	○○직으로 ○○○○국장 부적합
	2	○○○ (○○.○○.○○.)	○○(○○) 5급	1996.10.1.	○○○ ○○ 부적합
	3	○○○ (○○.○.○○.)	○○(○○○○) 5급	2011.3.1.	상시학습 미충족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고성군 ○○과에서는 4급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국장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과장(2020. 7. 7. 명예퇴직) 퇴직으로 5급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한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20. 8. 28.자 「2020년 하반기 수시인사 승진대상자 직렬결정 및 인사 일정(안)」을 방침결재 받으면서 4급 승진대상자 직렬을 미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2020. 9. 2.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특정 승진대상 직렬의 7배수 범위에서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표 4]와 같이 제출된 ○○직렬 3명, ○○직렬 5명 등 1명 승진대상에 7배수의 범위를 벗어난 두 개 직렬 8명의 승진 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심의를 하였고, 2020. 9. 2.자로 승진기한을 충족한 ○○ 5급 ○○○을 별다른 논의 없이 4급 ○○○○국장으로 부당하게 심의 의결하였다.

[표 4] 2020년 하반기 수시인사 시 4급 승진후보자 현황

후보자명부	순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비고
			현 직급	현직급 승진	
지방서기관 (3명)	1	○○○ (○○.○.○○.)	○○ 5급	2016.9.2.	상시학습 미충족
	2	○○○ (○○.○○.○.)	○○ 5급	2015.4.11	
	3	○○○ (○○.○○.○○.)	○○ 5급	2016.9.2.	상시학습 미충족
지방○○ 서기관 (5명)	1	○○○ (○○.○○.○○.)	○○(○○) 5급	2013.9.30.	상시학습 미충족
	2	○○○ (○○.○○.○○.)	○○(○○) 5급	1996.10.1.	
	3	○○○ (○○.○○.○○.)	○○(○○) 5급	2016.9.2.	
	4	○○○ (○○.○.○○.)	○○(○○○○) 5급	2011.3.1.	상시학습 미충족
	5	○○○ (○○.○.○○.)	○○(○○) 5급	2016.9.2.	상시학습 미충족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고성군 ○○과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결원을 임의로 과다 산정하거나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승진대상자 심의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를 사전 의결하지 않는 등 승진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르면 직제 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더라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 임용을 할 경우에는 연간 전보 인원의 10%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표 5]과 같이 전체 전보 인원 1,172명 중 38.9%에 해당하는 456명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하여 전보 임용함으로써 연례 반복적으로 연간 전보 인원의 10% 범위를 초과한 28.9% 인원에 대하여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하여 전보 임용을 시행하고 있다.

[표 5]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한 전보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3월
연간 전보인원 (A)	1,172	334	276	315	247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인원 (B)	456	114	126	116	100
필수보직기간 위반 전보임용 비율 (C=B/A×100)	38.9%	34.1%	45.6%	36.8%	40.5%
초과 비율 (D=C-10%)	28.9%	24.1%	35.6%	26.8%	30.5%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사실상 직위해제 및 근무지 지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등 [표 6]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되어 있다.

[표 6] 직위해제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관련)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직위가 있는 사람을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등의 사유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 11. 2. 군수 지시사항>○○○○○○단 및 ○○○○○○○단 확대 운영 계획’을 2020. 11. 2. 군수의 방침결재를 받은 후 ‘인사발령 통지(전보, 근무지 지정)’ 공문으로(2020. 11. 3.) 시행하여 [표 7]과 같이 ○○○○과장 ○○○(○○ ○급) 등 4명을 2020. 11. 3.부터 2020. 11. 11.까지 임시조직인 ○○○○○○○단, ○○○○○○○단에 근무지 지정 조치를 하였다.

[표 7] 사실상 직위해제 및 근무지 지정 현황

연번	기간	직위	직급	성명	근무지 지정	인사정보 시스템상 전보
1	2020. 11. 3. ~ 11. 11.	○○○○과장	○○ 5급	○○○	○○○○○○○단	○○과
2		○○○○○○○소장	○○ 5급	○○○		
3		○○면장	○○ 5급	○○○		
4		○○과장	○○ 5급	○○○	○○○○○○○단	○○○○○○○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비록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과장 또는 면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지 군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임시조직에 근무지 지정을 하였고, 해당 임시조직이 과장급 인력을 필요할 만큼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임시조직인 ○○○○ ○○단(○○과 소속)과 ○○○○○○단(○○○○○○○ 소속)에 직원으로 근무지 지정⁴⁾을 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위해제의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공정한 인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등을 위반하여 4·5급 승진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 ○○○면), ○○과 ○○○○○○○○ ○○○(현 ○○○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과 ○○○○○○○○ ○○○(현 ○○○○○○○○관), 감독책임자 ○○과 ○○○○○○○○ ○○○(현 ○○○장)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4) 근무지 지정한 4명은 3층 고성군수실 옆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대기하면서 군수지시 사항 등 현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해당 실과와 면에서는 부서의 장이 없는 상태로서 실질적인 직위 해제 상태였음

【일련번호 :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임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지방농촌지도사(일반임기제, 7급 상당)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각 호(1호~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그리하여 제1차 공고에서 1명이 지원하여 재공고를 하였고 재공고 결과 또다시 1명이 응시하여 지원자 1명에 대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시켰으나 [표 2]와 같이 합격자 ○○○은 ○○○○○의 자격요건인 ○○○○중이 아니라 ○○○○○중만 있고, 관련분야 ○년 이상 경력도 없어 ○○○○○○○에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합격자 ○○○ 응시자격 사항

학위	전공분야	취득일		종류
	○○○○	○○○○. ○. ○○.		○○
경력	근무기관	기간	직위	담당업무
	○○○○○○○○○○	○○○○○○○~○○○○○○○ (○년 ○개월)	○○○	○○, ○○○○, ○○○○ ○○
	(주)○○○○○○○○	○○○○○○○~○○○○○○○ (○년○개월)	○○	○○, ○○○○, ○○, ○○○○
자격	식품가공기능사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응시자격 요건의 부당한 중복 제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각 호(1호~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및 별표 5, 별표 5의2로 자격증 지정기준 및 자격증 구분표를 별도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2022. 1. 13. 시행)¹⁾」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근무경력)에 따른 임용과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학위 등)에 따른 임용일 경우 다음 [표 3]과 같이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상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근무경력)	
계급	임용 자격
5급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2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학위 등)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1)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2022. 1. 13.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으로 개정되어 시행됨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를 살펴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경력경쟁임용요건·자격’ 이외에 추가적인 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만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2020. 3. 31. ‘2020년 제1·2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 운영 ○○○○○○○○ ○급(○급상당)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면서 [표 4]와 같이 자격요건으로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소지자)로서 제3호(근무경력), 제9호(학위)를 모두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결국 제3호 또는 제9호 중 하나만 선택하였을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표 5]와 같이 2020년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임용한 임기제공무원 72명 중 8명의 자격요건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다.

[표 4] 2020년 제1·2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중 자격요건

채용등급	채용분야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 기제나급 (6급상당)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p>○○○○○○ ○급 이상 소지자 중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p> <p>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2.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전공분야 : ○○○○○○</p> <p>※ 실무경력 : ○○○○○○·○○ ○○○○○(○○, ○○) 이상 경력</p>

[표 5]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요건 위반 현황

연번	직급	성명	해당업무	임용일자	자격요건 부적정여부	비고
1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	20○○.○.○	경력+학력 중복	자격증 필수
2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20○○.○.○	자격증+경력 중복	
3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20○○.○.○	자격증+경력 중복	
4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20○○.○.○	자격증+경력 중복	
5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20○○.○.○	자격증+경력 중복	
6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 ○○	20○○.○.○	자격증+경력 중복	
7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20○○.○.○	자격증+경력 중복	
8	○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 ○○, ○○○	20○○.○.○	자격증+경력 중복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감사 지적 사례를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 ○○면), 실무담당자 ○○과 ○○○○○○○○ ○○○(현 ○○면), 실무책임자 ○○과 ○○○ ○○○(현 ○○면)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감독한 감독책임자 ○○과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면서, 허가 신청 개발 규모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확인하여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은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자는 등록요건¹⁾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²⁾에 해당하는 자의

1)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가.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출자금 3억원일 것

나. 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등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자(토지 10,000㎡ 미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법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2018. 3.)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허가(변경) 등을 하거나 신고(변경)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에는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건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일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인허가 명의변경이나 타인에게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확인시켜 주고 인허가와 동시에 해당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명의양도 등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표](연번 1)과 같이 2020. 6. 8. ○○면 ○○리 ○○○-○번지 외 6필지 6,789㎡(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개발규모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하여 피허가자(○○○, ○○○)로부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인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개발 행위허가를 처리하여 이후 피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2021. 2. 24.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통해 피허가자 ○○○을 ○○○, ○○○, ○○○로 부적정 하게 명의 변경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3. 3. 14. ~ 3. 22.) 중 토지면적 5,000㎡ 이상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표]와 같이 감사대상기간('20. 2. 1. ~ '23. 3. 22.) 총 9건의 개발 행위허가건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부적정 처리 현황

연번	허가일자	개발위치	면적 (㎡)	개발행위 목적	허가 기간	피허가자	위반 내용
1	'20. 6. 8.	○○면 ○○리 ○○○-○ 외 6필지	6,759	태양광발전시설	'20. 6. ~ '22. 6.	○○○, ○○○	비등록대상 확인서 제출 이후 명의변경 (○○○ → ○○○, ○○○, ○○○)
2	'21. 9.14.	○○면 ○○리 산○○○ 외 3필지	7,245	야영장조성	'21. 7. ~ '23. 6.	○○○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또는 비등록대상 확인서 미제출)
3	'21.10.26.	○○면 ○○리 ○○○번지	6,204	우량농지조성	'21.11. ~ '23.10.	○○○	
4	'20. 6.12.	○○면 ○○리 산○○○	9,970	단독주택(11가구), 진입도로	'20. 6. ~ '23.12.	○○○	비등록대상 확인 사실 도지사 미통보
5	'20. 3.24.	○○면 ○○리 ○○○ 외 4필지	5,447	단독주택(10부지) 및 진입도로	'20. 4. ~ '24. 1.	○○○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 임의 결정 (연간 20호 미만 여부 미조회)
6	'20. 3.30.	○○면 ○○리 ○○○-○ 외 1필지	9,736	단독주택(8부지) 및 진입도로	'20. 3. ~ '23.11.	○○○○○ ○○(주)	
7	'20. 9.17.	○○면 ○○리 ○○번지 외 41필지	8,862	단독주택(8동) 및 진입도로	'20.10. ~ '22. 9.	○○○	
8	'20.12. 9.	○○면 ○○리 ○○○ 외 5필지	6,279	단독주택(10가구) 및 진입도로	'20.11. ~ '23.10.	(주)○○○ ○○○	
9	'22. 4.29.	○○면 ○○리 산○○○ 외 1필지	5,842	단독주택(8동)	'22. 4. ~ '24. 3.	○○○	

[출처 : 고성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이 중 2건(연번 2, 3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명의변경 허가건(연번 1번)과 같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를 위반³⁾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등록사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과실로 인해 시정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1건(연번 4번)은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고도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5건(연번 5 ~ 9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자가 맞는지 2023. 3. 22. 감사일 현재 허가 당해연도 연간 개발 규모를 확인(조회)한 결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허가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예외로 정하는 연간 개발 규모를 확인(조회)하지 않고 신청된 허가 건의 규모로만 임의 판단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부적정하게 개발행위 허가(변경)하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위반 결과를 초래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휴직), ○○○○○과 ○○○○○○○○ ○○○,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담당)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당시 감독책임자 ○○○○과 ○○○○○○○○ ○○○(현 ○○○○○○, ○○○○○○장), ○○○○과 ○○○○○○○○ ○○○(현 ○○○○○○장)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 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제출사실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 실무책임자 ○○○○과 ○○○○○○○○ ○○○(현 ○○면 ○○○○담당)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구조안전기준 미달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표]와 같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리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면 ○○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현황

허가일자	허가위치	용도지역	허가내용	허가기간	피허가자
'22. 9.22.	○○면 ○○리 ○○○-○, ○○○-○	농림지역	건물(축사) 지붕위 태양광 설치 500㎡ (발전용량 99.84kw)	'22. 9. ~ '23. 9.	○○○

[출처 : 고성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2항에 따라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군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성군계획 조례」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21호 가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으면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며, 개발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허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청문을 통해 허가를 취소 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 신청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획이 구조안전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구조·안전 검토결과서 등 제출된 허가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허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구조·안전 검토결과서에는 태양광지지구조물은 최대 내력비¹⁾ 0.73이내, 기존건물은 최대 내력비 0.96 이내로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표지에는 “설계조건을 기초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설계조건에 유의하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고, 구조도면에는 기존 건물의 구조를 반드시 보강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 누락 시 지붕전체 내력저하가 발생한다는 설계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 신청 내용상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 설계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서류를 반려하거나 허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했고, 최소한 조치 이행의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 허가기간 중이라도 보완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

한편 위 구조 보강이 누락된 채 허가된 사항이 담당공무원의 허가업무에 대한 검토 소홀에서 비롯된 것과는 별론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설치계획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 검토결과서 설계조건에 미달하는 서류(설치계획) 제출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어 청문을 통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 처분·조치를 명하여야 하나, 2022. 9월 허가 시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허가 신청자는 기존 건물의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설계조건)을 구조·안전 검토결과서 제출을 통해 2022. 9월 허가 신청 당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 보강 설계내역을 누락한 채 허가 신청하였고, 실제 2023. 3. 22. 감사일

1) 내력비 = 작용력 / 부재내력(물체가 외부의 힘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

현재까지 구조 보강 설계내역을 반영하여 변경허가 신청하거나 필요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허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조 보강 설계내역을 반영하여 변경허가 신청 등 필요 처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요구하고, 당시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발행위허가 보완 등의 처분·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면 ○○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 ○○면 ○○리 ○○○○-○번지에 [표]와 같이 신축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리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리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구분	신고 수리일	주용도	구조	동수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역
							연면적	
신축	'22.1.21.	제2종근·생 (제조업소)	일반철골조, 경량철골조	1동	지상2	694중 684㎡	141.76㎡	계획관리지역
							199.25㎡	
위치	고성군 ○○면 ○○리 ○○○○-○번지(답)							

[출처 : 고성군 허가문서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건축허가 대상 및 허가 기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건축신고를 수리하고자 할때는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리하여야 하고,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필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발코니관련 기준해설」(국토교통부 지침 2005. 12. 26.)에 따르면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로 [그림 1]의 예시의 B-3, B-7, B-10, B-16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그림 1] 발코니관련 기준해설(발코니여부)

▶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동-서 방향	남-북 방향	발코니여부	서비스면적계산의 기준이 되는 외벽
B-1	내부-외부	외부-외부	○	실(A)
B-2	내부-외부	내부-외부	○	실(A)와 실(B)에 접하는 길이 중 가장 긴 외벽
B-3	내부-내부	외부-외부	×	
B-4	외부-내부	외부-외부	○	실(B)
B-5	외부-내부	외부-내부	○	실(A)와 실(B)에 접하는 길이 중 가장 긴 외벽
B-6	외부-외부	내부-외부	○	실(A)
B-7	외부-외부	외부-외부	×	
B-8	외부-외부	내부-외부	○	실(B)
B-9	외부-외부	외부-내부	○	실(A)
B-10	외부-외부	외부-외부	×	
B-11	외부-외부	외부-내부	○	실(B)
B-12	외부-내부	외부-외부	○	실(A)
B-13	외부-내부	외부-외부	○	실(B)
B-14	내부-외부	외부-외부	○	실(A)
B-15	내부-외부	외부-외부	○	실(B)
B-16	외부-외부	외부-외부	×	
B-17	내부-내부	내부-외부	○	실(B)

[출처 : 국토교통부 지침(발코니관련 기준해설) 발췌]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노대¹⁾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1) 노대 : 건물 벽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지면과 닿지 않는 바닥 또는 마루. 주로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음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건축신고(허가)건에 대한 건축물 발코니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및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발코니 면적은 허용기준 범위까지만 바닥면적에서 공제하되, 발코니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리 건축물이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2022. 1. 21. 연면적 199.25㎡ 건축신고건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리 건축물은 2층에 발코니가 있으며, 1.5㎡는 동서·남북 방향 모두 외부-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발코니로 표시된 면적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2층면적을 64.25㎡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리 건축물은 1, 2층 바닥면적을 합산하면 연면적 200.75㎡의 건축허가 대상이나,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과실로 인해 건축신고건으로 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허가자의 건축사 감리 지정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등에 위반되어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처분·조치를 명하여야 하나,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허가서류(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하고 적법하게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건축신고를 수리한 실무담당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 요구하고,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건축신고(허가) 보완 등의 처분·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가축분뇨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따른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별표 7]에 맞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53조(과태료)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하지 않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는 등 12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잘못하여 8,8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분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위반일	고성군 행정처분	정상 처분기준
계		15건			과태료 1,900	과태료 10,700
1	○○○	○○면 ○ ○○○길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2021. 11. 9.	개선명령 과태료 500	개선명령 과태료 700
2				2022. 4. 19.	개선명령 과태료 700	개선명령 과태료 1,000
3	○○○	○○면 ○○○길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0. 8. 5.	개선명령 경고 고발	개선명령 경고 고발 과태료 1,000
4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0. 10. 22.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고발 과태료 1,000
5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1. 8. 23.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고발 과태료 1,000

연번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위반일	고성군 행정처분	정상 처분기준
6	○○○	○○면 ○○리 ○○○○-○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허가시설)	2020. 7. 10.	고발	조치명령 고발
7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허가시설)	2020. 9. 10.	조치명령(2차) 고발	조치명령(2차) 고발 경고
8			조치명령(2차) 불이행	2020. 9. 10.	고발	사용중지명령 1개월 고발
9	○○○	○○면 ○○리 ○○○○	처리시설 없이 배출시설 운영	2021. 8. 31.	개선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300
10	○○○	○○면 ○○○길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2020. 10. 14.	개선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1,000
11	○○ ○○	○○면 ○○○길 ○○○ [○○○○(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2021. 3. 5.	개선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700
12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2021. 10. 14.	개선명령 과태료 700	개선명령 과태료 1,000
13	○○○	○○면 ○○○길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1. 4. 20.	개선명령 경고 고발	개선명령 경고 고발 과태료 1,000
14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1. 6. 23.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1개월 고발 과태료 1,000
15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2021. 8. 31.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2개월 고발 과태료 1,0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대상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3등급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우수·일반·중점관리 3등급으로 분류하여 지도·점검²⁾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정기 점검대상 시설 중 30~35%만 점검하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우수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일반 : 우수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2년간 지도점검 미 실시 사업장

중점 : 악취 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배출사업장

2)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 기준(점검횟수/연)

구 분	등급별시설별	시설별	특정지역	기타지역	비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우수관리	허가대상	2	1	
		신고대상	1	1/2	
	일반관리	허가대상	4	2	
		신고대상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4	4	
		신고대상	4	2	

※ 특정지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정기	대상	정기	대상	정기
점검율	34%		35%		30%	
계	689	146	711	162	674	160
우수	668	125	691	142	653	139
일반	19	19	10	10	5	5
중점	2	2	10	10	16	16

※ 민원에 따른 수시점검 횟수 : 2020년 85회, 2021년 87회, 2022년 39회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가축분뇨법」 제18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현 ○○과), ○○과 ○○○○○○ ○○○(현 ○○면사무소)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과), ○○과 ○○○○○○ ○○○, ○○과 ○○○○○○ ○○○(현 교육)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및 시정 요구

제 목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등록·관리와 축산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따르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따르면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시설 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에 따르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1,000천 원, 2차 2,000천 원, 3차 5,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2022년 관내에 등록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348대에 대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보수교육 기간이 4년을 경과한 방역 차량 ○○○○○○○ 운전자인 ○○○ 등 19명이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19,000천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차량유형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등록일자	교육 수료일	4년 경과 보수교육 기간	미부과 과태료	비고
계			19명				19,000	
1	시료채취, 방역	○○○○○○○	(○○○)	2012. 10. 4.	2018. 3. 14.	2022. 6. 13.	1,000	
2	원유운반	○○○○○○○	○○○	2012. 10. 16.	2016. 10. 27.	2020. 1. 26.	1,000	
3	가축분뇨운반	○○○○○○○ ○○○○○○○	○○○	2012. 11. 29.	2017. 11. 8.	2022. 2. 7.	1,000	
4	가축운반	○○○○○○○	○○○	2012. 12. 10.	2017. 4. 27.	2021. 7. 26.	1,000	
5	가축분뇨운반	○○○○○○○	(○○○)	2012. 12. 27.	2017. 11. 8.	2022. 2. 7.	1,000	
6	가축운반	○○○○○○○	○○○	2013. 10. 1.	2017. 11. 8.	2022. 2. 7.	1,000	
7	가축운반	○○○○○○○	○○○	2013. 10. 24.	2017. 11. 8.	2022. 2. 7.	1,000	

연번	차량유형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등록일자	교육 수료일	4년 경과 보수교육 기간	미부과 과태료	비고
8	가축운반	○○○○○○○○	○○○	2013. 11. 20	2018. 3. 14	2022. 6. 3.	1,000	
9	가축운반	○○○○○○○○	○○○	2014. 1. 23	2017. 4. 27	2021. 7. 26.	1,000	
10	원유운반	○○○○○○○○	○○○	2015. 1. 12	2016. 10. 8	2021. 1. 7.	1,000	
11	가축운반	○○○○○○○○	○○○	2015. 6. 26	2017.11. 8	2022. 2. 7.	1,000	
12	사료운반	○○○○○○○○	(○○○)	2017. 3. 30	-	-	1,000	
13	사료운반	○○○○○○○○ ○○○○○○○○	○○○○ ○○○○	2017. 6. 22 2019. 11. 13	2017. 11. 8	2022. 2. 7.	1,000	
14	사료운반	○○○○○○○○	○○○	2017. 11. 8	2017. 11. 8	2022. 2. 7.	1,000	
15	가축분뇨운반	○○○○○○○○ ○○○○○○○○	○○○○○○○ ○○○○○○○	2018. 4. 10	-	2022. 5. 27.	1,000	
16	컨설팅	○○○○○○○○	○○○	2018. 6. 29	-	-	1,000	
17	가축사육시설 의 운영·관리	○○○○○○○○	○○○	2018. 7. 2	2017. 11. 8	2022. 2. 7.	1,000	
18	사료운반	○○○○○○○○	○○○○○ ○○○○○	2018. 8. 7	-	-	1,000	
19	가축운반	○○○○○○○○	○○○	2018. 11. 29	-	-	1,0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등록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3항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등)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 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과태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0천 원, 2차 2,000천 원, 3차 5,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황을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축산 농가가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23. 3. 14.~3. 22.) 중 고성군 ○○○○과에서 제출한 등록 외국인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축산농가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표 2]와 같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현지 실태조사를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11,000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축산농가 고용신고 미이행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성명	국적	성별	축산농가	등록일	미부과 과태료	비고
총계	27명					11,000	
1	○○ ○○ ○○○○○	베트남	남	○○○○○○○○○○(주)	2019. 10. 8.	1,000	
2	○○ ○○ ○○○○○	베트남	남	○○○○○○○○○○(주)	2022. 9. 8.		
3	○○ ○○ ○○○○○	네팔	남	○○○○○	2022. 2. 22.	1,000	
4	○○ ○○ ○○○○○	네팔	남	○○○○○	2022. 7. 15.	1,000	
5	○○ ○○ ○○○○○	네팔	남	○○○○○	2022. 8. 1.		
6	○○ ○○ ○○○○○	캄보디아	남	○○○○○	2023. 2. 21.		
7	○○ ○○ ○○○○○	네팔	남	○○○○○	2019. 9. 6.	1,000	
8	○○ ○○ ○○○○○	네팔	남	○○○○○	2019. 3. 4.		
9	○○ ○○ ○○○○○	네팔	남	○○○○○	2019. 5. 29.		
10	○○ ○○ ○○○○○	네팔	남	○○○○○	2022. 2. 17.		
11	○○ ○○ ○○○○○	네팔	남	○○○○○	2022. 9. 29.	1,000	
12	○○ ○○ ○○○○○	네팔	여	○○○○○	2022. 9. 29.		
13	○○ ○○ ○○○○○	네팔	남	○○○○○	2019. 1. 3.	1,000	
14	○○ ○○ ○○○○○	네팔	남	○○○○○(○○○)	2022. 7. 12.	1,000	
15	○○ ○○ ○○○○○	네팔	남	○○○○○(○○○)	2019. 12. 10.		
16	○○ ○○ ○○○○○	네팔	남	○○○○○(○○○)	2016. 9. 9.		
17	○○ ○○ ○○○○○	네팔	남	○○○○○(○○○)	2019. 10. 8.	1,000	
18	○○ ○○ ○○○○○	네팔	남	○○○○○(○○○)	2022. 10. 20.		
19	○○ ○○ ○○○○○	네팔	남	○○○○○	2016. 7. 22.	1,000	
20	○○ ○○ ○○○○○	네팔	남	○○○○○	2012. 5. 24.		
21	○○ ○○ ○○○○○	네팔	남	○○○○○	2022. 1. 21.	1,000	
22	○○ ○○ ○○○○○	네팔	남	○○○○○	2022. 9. 26.		
23	○○ ○○ ○○○○○	네팔	남	○○○○○	2022. 9. 26.		
24	○○ ○○ ○○○○○	네팔	남	○○○○○	2022. 9. 26.		
25	○○ ○○ ○○○○○	네팔	남	○○○○○	2017. 10. 18.		
26	○○ ○○ ○○○○○	캄보디아	남	○○○○○	2019. 4. 22.		
27	○○ ○○ ○○○○○	네팔	남	○○○○○	2022. 11. 17.	1,000	

[출처: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경상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단순히 도에서 제공하는 현황 자료만 관리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경상남도 및 농림부 외국인 현황 조사 요청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제 목	일 시	기관명	비고
	8건			
1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및 정보 현행화 협조 요청	2020. 6. 12.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2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 조사	2020. 11. 23.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3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2021. 1. 26.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4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2021. 7. 14.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5	외국인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4. 7.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6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6. 25.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7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관계자 정보 입력 철저 요청	2022. 11. 23.	농림축산검역본부	
8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2022. 12. 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출처: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및 제17조의3 등을 위반하여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등록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 ○○과 ○○○○○○○ ○○○ (현 ○○면),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 ○○○(현 ○○읍), ○○과 ○○○○○○○○ ○○○, ○○과 ○○○○○○○○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20조의6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안한 축산농가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및 시정 요구

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소, ○○○○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 등 3개 부서는¹⁾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승인사항 통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1) ○○○○과, ○○○○과, ○○○○○○○○○소

또한 위 법 제47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관(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3건에 대하여 사업승인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 면적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관인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아 약 116백만 원²⁾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 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미통보 사업 현황

구분	승인부서	개발 사업명	사업 승인일	사업규모 (㎡)	부과예상금액 (원)	사업자
계	3개 부서	3건		155,078	116,698,500	
1	○○○○과	고성 ○○면 ○○○○(○○○) 및 ○○○○(○○, ○○) 조성사업	2020. 11. 13.	43,756	13,126,800	(주)○○
2	○○○ ○○○○ ○○소	○○○ ○○○○ ○○○○ ○○○○(변경) (훼손면적 : 175,335㎡)	2022. 2. 10.	변경 훼손면적 : 253,307 (추가 훼손면적 : 77,972)	93,566,400	○○○
3	○○○○과	○○○○○ ○○○○○○ ○○○○ ○○ 및 ○○○○(변경)	2022. 3. 3.	33,351	10,005,300	○○○ ○○(주)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개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도 환경정책과 통보 시 실제 훼손 면적 확정 후 재산정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 ○○○○○○○○○소,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등을 위반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통보하지 않은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 ○○○단), ○○○○○○○팀 ○○○○○○○ ○○○(현 ○○○○○과),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 ○○○○○○○팀 ○○○○○○○ ○○○(현 ○○○○○○○면사무소),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등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 누락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9】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및 시정 요구

제 목 전기사업 및 전기설비 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 및 전기설비를 허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¹⁾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관한 고시(2021-25호) 제8조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준비기간을 18개월 또는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가 취소된 전기사업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별첨]과 같이 총 54건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중 19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사업준비기간을 18개월로 해야 함에도 사업준비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하였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면 ○○○○로 ○○○-○) 등 54명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단순히 2022. 4. 1.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직권취소 대상 안내] 공문만을 발송하고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준비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다른 전기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업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허가만 받아놓고 용량을 점유하거나 매대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전기사업자에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을 지연하여 고성군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전기설비 정기검사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²⁾와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내역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단순히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촉구 안내 공문만 발송하고 정기검사 시기 경과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의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경과 안내공문 발송 내역

구분	전기안전공사 통보일자	내 용	고성군 안내일자	비고
총계	37건	안내 이행 : 18회, 안내 미이행 19회		

2) [별표 4] 요약 : 대상 별 1년 ~ 4년 이내

구분	전기안전공사 통보일자	내 용	고성군 안내일자	비고
1	2020. 2. 7.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0. 2. 10.	
2	2020. 3.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3	2020. 4. 2.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0. 4. 3.	
4	2020. 5. 6.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5	2020. 6. 2.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6	2020. 8.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0. 8. 6.	
7	2020. 9.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8	2020. 10. 8.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9	2020. 11.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0	2020. 12. 8.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1	2021. 1.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1. 1. 6.	
12	2021. 2.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3	2021. 3.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4	2021. 4. 2.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5	2021. 5.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6	2021. 6.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7	2021. 7.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8	2021. 8. 9.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19	2021. 9. 6.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20	2021. 10. 6.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1. 10. 12.	
21	2021. 11.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22	2021. 12.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23	2022. 1. 6.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1. 11.	
24	2022. 2.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2. 7.	
25	2022. 3.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3. 7.	
26	2022. 4. 1.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4. 1.	
27	2022. 5.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5. 4.	
28	2022. 6.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6. 7.	
29	2022. 7.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7. 6.	
30	2022. 8. 2.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8. 4.	
31	2022. 9. 5.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9. 5.	
32	2022. 10. 4.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10. 4.	
33	2022. 11. 1.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11. 1.	
34	2022. 12. 1.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2. 12. 1.	
35	2023. 1.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2023. 1. 9.	
36	2023. 2. 7.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37	2023. 3. 3.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기 경과 알림	안내 안함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②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과
○○○○○○○○ ○○○(현 ○○○○○과), ○○○○○과 ○○○○○○○ ○○○
(현 ○○○○○○○○○소), ○○○○○과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태양광)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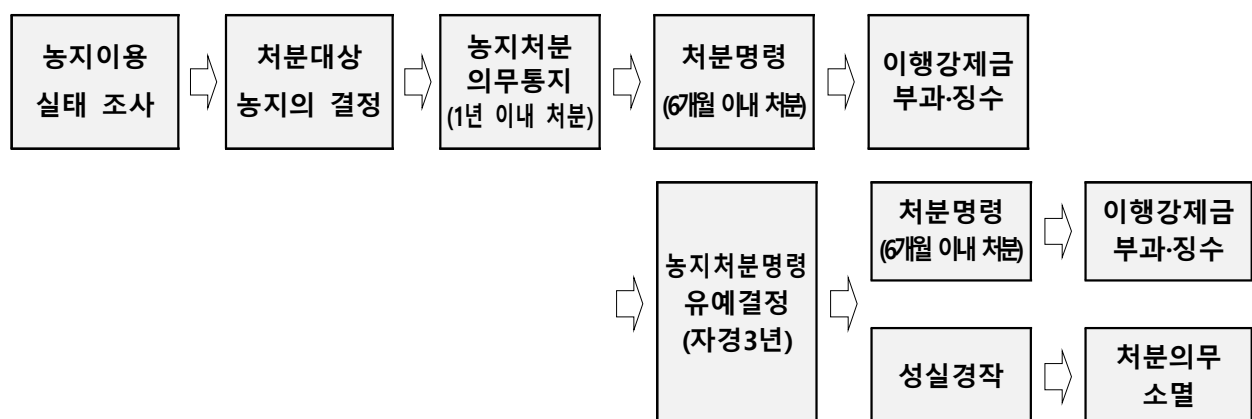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지처분명령 취소 절차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농지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등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¹⁾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그림 1]과 같이 하고 있다.

[그림 1]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처리단계



[출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재구성]

1) 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등을 제외하고 매년 9.1.~11.30.(90일간) 조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음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처분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기간에 자기농업 경영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VI.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르면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따른 시장·군수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밝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고지)에 따르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 결정한 농지에 대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려야 하고, 6개월이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자기농업경영 등의 사유로 처분명령 유예를 결정한 농지에 대해 최근 3년간('20년 ~ '22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 ○○리 ○○○○-○번지 등 44필지(51,790㎡)의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아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처분통지 및 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3명(5필지, 6,464㎡)을 제외하고, [표]와 같이 29명(39필지, 45,326㎡)의 이의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처분명령을 취소하였으며, 특히 농업회사법인 (주)○○ 등 18명(21필지, 23,141㎡)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지났음에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농지처분 명령을 취소하였다.

[표] 처분명령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처분명령 취소한 농지현황*
(단위 : 명, ㎡, 필지)

연번	성 명	이의신청 농지현황			처분명령 취소	처분의무 소멸 ²⁾
		신청기간 (30일 이내)	지번	면적(㎡)		
계	29명		39필지	45,326	39	28
1	농업회사법인 (주)○○ 등18명	기간 경과	○○면 ○○리 ○○○○-○번지 등 21필지	23,141	21	14
2	○○○ 등 11명	기간내	○○면 ○○리 ○○번지 등 18필지	22,185	18	14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 내역 별첨 참고

2) 농지처분명령유예 3년 만료일 기준

그리고 2021. 5. 26. ○○면으로부터 처분대상 농지를 재조사한 결과 ○○리 ○○○번지(1,086㎡)의 농지가 미경작·휴경임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 농지임을 제출받고,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2021. 6. 22.부터 2021. 12. 21.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6개월이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2. 21.³⁾ 농지 소유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농지 정지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농업경영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2. 27. 기존 농지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이행강제금 6,494,280원⁴⁾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농지는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농지처분명령 유예만료일('22. 6. 26.)을 기점으로 처분 의무가 소멸하였고, 2023. 1월 현장 사진 확인결과 해당 농지는 여전히 미경작, 휴경상태로 남아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농지법」 제62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하여 농지처분명령의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농지법」 제11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을 위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 ○○○면), ○○

3) 처분만료일

4) 29,900원(2022년 공시지가 기준) x 1,086㎡ x 100/20 = 6,494,280원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처분명령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처분명령 취소한 농지내역

(단위 : 명, m², 필지)

구분	성 명	처분명령 취소농지			처분일무 통지	처분명령 (이의신청 청기기간)	이의 신청	처분명령 취소	처분명령 유예	처분일무 소멸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29명(39필지)		45,326			39필지	39필지		28필지
계(기간초과)		18명(21필지)		23,141			21필지	21필지		14필지
1	농업회사법인 (주)○○○	○○면 ○○리 ○○○○-○	전	5,346	'16.4.15.	'21.6.23. ('21.7.22. 까지)	'21.10.15.	'21.10.22.	'18.6.14.~ '21.6.13.	'21.6.13.
2	○○○	○○면 ○○리 ○○○	전	1,289	'15.4.8.	'20.6.30. ('20.7.29. 까지)	'20.8.7.	'20.8.14.	'18.5.24.~ '21.5.23.	'21.5.23.
3	○○○	○○면 ○○리 ○○○-○	답	166	'16.4.15.	'20.6.30. ('20.7.29. 까지)	'20.9.1.	'20.9.8.	'17.6.27.~ '20.6.26.	'20.6.26.
4	○○○	○○면 ○○리 ○○○	답	284	'16.4.15.	'20.6.30. ('20.7.29. 까지)	'20.9.1.	'20.9.8.	'17.6.27.~' 20.6.26.	'20.6.26.
5	○○○	○○면 ○○리 ○○○-○	답	1,078	'16.4.15.	'20.6.30. ('20.7.29. 까지)	'20.9.1.	'20.9.8.	'17.6.27.~ '20.6.26.	'20.6.26.
6	○○○	○○면 ○○리 ○○○-○	답	338	'17.4.11.	'21.6.23. ('21.7.22. 까지)	'21.7.26.	'20.10.27.	'18.7.31.~ '21.7.30.	'21.7.30.
7	○○○	○○면 ○○리 ○○○-○	답	193	'17.4.11.	'21.6.23. ('21.7.22. 까지)	'21.8.23.	'21.8.30.	'18.6.18.~ '21.6.17.	'21.6.17.
8	○○○	○○면 ○○리 ○○○	답	394	'17.4.11.	'20.6.30. ('20.7.29. 까지)	'20.8.12.	'20.8.18.	'18.8.21.~ '21.8.20.	'21.8.20.
9	○○○	○○면 ○○리 ○○○	전	750	'17.4.11.	'20.6.30. ('20.7.29. 까지)	'20.8.12.	'20.8.18.	'18.8.21.~ '21.8.20.	'21.8.20.
10	○○○	○○면 ○○리 ○○-○	답	1,686	'17.4.11.	'20.6.30. ('20.7.29. 까지)	'20.7.31.	'20.8.24.	'18.6.18.~ '21.6.17.	'21.6.17.
11	○○○	고성읍 ○○리 ○○○-○	답	701	'18.4.13.	'20.6.30. ('20.7.29. 까지)	'20.8.7.	'20.8.20.	'19.6.27.~ '22.6.26.	'22.6.26.
12	○○○	고성읍 ○○리 ○○-○	답	1,713	'18.4.13.	'20.6.30. ('20.7.29. 까지)	'20.8.7.	'20.8.20.	'19.6.27.~ '22.6.26.	'22.6.26.
13	○○○	○○면 ○○리 ○○○	전	1,086	'18.4.13.	'21.6.23. ('21.7.22. 까지)	'21.12.2 1.	'21.12.27.	'19.6.27.~ '22.6.26.	'22.6.26.
14	○○○	○○면 ○○리 ○○○-○	전	827	'18.4.1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4.	'19.6.27.~ '22.6.26.	'22.6.26.
15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16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17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18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19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20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12.	'20.8.12.~ '23.8.11.	'23.8.11.

구분	성명	처분명령 취소농지			처분임무 통지	처분명령 (이의신청 청기각)	이의 신청	처분명령 취소	처분명령 유예	처분임무 소멸
		소재지	지목	면적						
21	○○○	○○면 ○○리 ○○○	답	883	'19.4.3.	'20.6.30. (20.7.29. 까지)	'20.8.7.	'20.8.24.	'20.8.25.~ '23.8.24.	'23.8.24.
22	○○○	○○면 ○○리 ○○○	답	883	'19.4.3.	'21.6.23. (21.7.22. 까지)	'21.8.6.	'21.8.13.	'20.8.25.~ '23.8.24.	'23.8.24.
23	○○○	고성읍 ○○리 ○○○-○	전	748	'20.5.7.	'21.6.23. (21.7.22. 까지)	'21.7.29.	'21.8.6.	'21.8.6.~ '24.8.5.	'24.8.5.
24	○○○	○○면 ○○리 1195-2	답	1,416	'20.5.7.	'21.6.23. (21.7.22. 까지)	'21.8.20.	'21.8.29.	'21.8.30.~ '24.8.29.	'24.8.29.
25	○○○	○○면 ○○리 ○○○-○	전	221	'20.5.7.	'21.6.23. (21.7.22. 까지)	'21.7.26.	'21.7.27.	'21.7.27.~ '24.7.26.	'24.7.26.
26	○○○	○○면 ○○리 ○○○-○	전	221	'20.5.7.	'21.6.23. (21.7.22. 까지)	'21.7.26.	'21.7.27.	'21.7.27.~ '24.7.26.	'24.7.26.
27	○○○	○○면 ○○리 ○○○-○	전	109	'20.5.7.	'21.6.23. (21.7.22. 까지)	'21.7.26.	'21.7.27.	'21.7.27.~ '24.7.26.	'24.7.26.
28	○○○	○○면 ○○리 ○○○-○	전	109	'20.5.7.	'21.6.23. (21.7.22. 까지)	'21.7.26.	'21.7.27.	'21.7.27.~ '24.7.26.	'24.7.26.
소계(기간내)		11명(18필지)		22,185			18필지	18필지		14필지
29	○○○	○○면 ○○리 ○○	전	393	'17.4.11.	'21.6.23. (21.7.22. 까지)	'21.7.6.	'21.7.13.	'18.6.18.~ '21.6.17.	'21.6.17.
30	○○○	○○면 ○○리 ○○	전	370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1	○○○	○○면 ○○리 ○○	답	73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2	○○○	○○면 ○○리 ○○	전	889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3	○○○	○○면 ○○리 ○○	답	3,557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4	○○○	○○면 ○○리 ○○-○	답	562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5	○○○	○○면 ○○리 ○○-○	답	2,347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6	○○○	○○면 ○○리 ○○	답	1,848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7	○○○	○○면 ○○리 ○○	답	774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8	○○○	○○면 ○○리 ○○	답	883	'17.4.11.	'20.6.30. (20.7.29. 까지)	'20.7.7.	'20.7.20.	'18.6.18.~ '21.6.17.	'21.6.17.
39	○○○	○○면 ○○리 ○○-○	답	542	'17.4.11.	'20.6.30. (20.7.29. 까지)	'20.7.22.	'20.7.24.	'18.6.18.~ '21.6.17.	'21.6.17.
40	○○○	○○면 ○○리 ○○-○	답	613	'17.4.11.	'21.6.23. (21.7.22. 까지)	'21.7.14.	'21.7.19.	'18.6.18.~ '21.6.17.	'21.6.17.
41	○○○	○○면 ○○리 ○○○-○	전	810	'18.4.13.	'21.6.23. (21.7.22. 까지)	'21.6.28.	'21.6.30.	'19.12.24.~ '22.12.23.	'22.12.23.
42	○○○	○○면 ○○리 ○○○-○	답	202	'18.4.13.	'21.6.23. (21.7.22. 까지)	'21.7.14.	'21.7.15.	'19.7.11.~ '22.7.10.	'22.7.10.

구분	성 명	처분명령 취소농지			처분임무 통지	처분명령 (이의신청기간)	이의 신청	처분명령 취소	처분명령 유예	처분임무 소멸
		소재지	지목	면적						
43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4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5	○○○	고성읍 ○○리 ○○○-○	답	296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6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7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8	○○○	고성읍 ○○리 ○○○	답	604	'19.4.3.	'21.6.23. ('21.7.22. 까지)	'21.7.5.	'21.7.13.	'20.8.12.~ '23.8.11.	'23.8.11.
49	○○○	○○면 ○○리 ○○○	전	754	'19.4.3.	'21.6.23. ('21.7.22. 까지)	'20.7.20.	'21.7.22.	'20.7.2.~ '23.7.1.	'23.7.1.
50	○○○	○○면 ○○리 ○○○○	답	2,434	'19.4.3.	'20.6.30. ('21.7.22. 까지)	'20.7.28.	'20.7.31.	'20.7.31.~ '23.7.30.	'23.7.30.
51	○○○	○○면 ○○리 ○○○○	답	2,434	'19.4.3.	'21.6.23. ('21.7.22. 까지)	'21.7.14.	'21.7.19.	'20.7.31.~ '23.7.30.	'23.7.3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통보·주의 요구

제 목 액화석유가스사업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충전사업, 판매사업, 집단공급사업 등을 관리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안전관리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시설·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0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은 같은 법 제69조(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이 30일 이내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법령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주)○○ 등 4개의 업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주)○○의 경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안전가스공사로부터 총 4회의 미선임 공문을 통보받았으나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지않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도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않고 있다.

[표 1] 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체 통보 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	주소	구분	검사일	위반내용	위반사항 통보 공문	비고
1	(주)○○ (○○○)	고성군 ○○면 ○○○○길 ○○○	LPG 특정사용시설	'19. 12. 30.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0. ○. ○.)	4회 (3년11월)
				'20. 12. 24.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0. ○○. ○○.)	
				'21. 12. 31.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22. 11. 28.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연번	업체명 (대표)	주소	구분	검사일	위반내용	위반사항 통보 공문	비고
2	○○○○○○ ○○지점 (○○○)	고성군 ○○면 ○○로 ○○○○	LPG 특정사용시설	'21. 12. 31.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2회 (1년6월)
				'22. 6. 20.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3	(주)○○○○○ (○○○)	고성군 ○○면 ○○로 ○○○-○○	LPG 특정사용시설	'22. 11. 4.	안전관리자 미선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4	○○○○○○ (○○○)	고성군 ○○면 ○○○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2. 12. 12.	안전관리자 및 가스배상책임 보험가입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부-○○○○○ (‘22. ○○. ○○.)	1회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정기검사 미이수에 따른 고발조치 미이행

또한 고성군 ○○○○과에서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주)○○○○○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을 정기검사를 수검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12일에서야 [표 2]와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 미수검 사실 통보와 1년 이상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고발조치 없이 폐업수리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정기검사 미이수 내역

구분	상호명	허가번호	대표자	주소	정기검사	
					연도	수검여부
고압가스	○○○○○○○ (주)○○○○○	○○○○-○○○○	○○○○○○○	경남 고성군 ○○읍 ○○로 ○○	2016	부
		○○○-			2017	부
		○○-○-○○○○○			2018	부
○○○○-○○○○		2019			부	
○○○-		2020			부	
○○-○-○○○○○		2021			부	
2022		부				
액화 석유가스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과 업무 담당자에게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조직진단을 통해 직원 보충 등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등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와 정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현 ○○○○○과) ○○○○○○ ○○○(현 ○○○○○○○○○소), ○○○○○과(현 ○○○○○과) ○○○○○○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등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와 정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감독책임자 ○○○○○과(현 ○○○○○과) ○○○○○○○○ ○○○(현 ○○○○○○○단), ○○○○○과(현 ○○○○○과) ○○○○○○○○ ○○○(현 ○○○○○○○○○소)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등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업체가 빠른시일 내에 선임될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통보·주의 요구

제 목 굴패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굴패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점용·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굴패각 집하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

(단위 : m²)

피허가자	허가사항					변경 허가사항					
	구분	지번	면적 (㎡)	내용	최초 허가기간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기간	내용	기간	내용	기간	내용
○○ ○○계 (○○○)	계		4,399								
	①	○○면 ○○리 ○○-○지선	1,403	굴패각 집하장 설치	'07.12.28.~ '12.12.27.	'12.12.28.~ '17.12.27.	기간 연장	'17.12.28.~ '22.12.27.	기간 연장	'22.12.28.~ '27.12.27.	기간 연장
	②	○○면 ○○리 ○○-○지선	2,996		'10.11.12.~ '25.11.11.	-	-	-	-	-	-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수면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 토양오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원상회복) 제1항에 따르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기 전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사후관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사후관리)에 따르면 행정기관 장은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해역이용협의 내용 및 해역이용 협의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유수면점사용(굴 패각 집하장)협의 회신」(해양수산부, 2007. 12. 27.) 및 「해역이용협의 의견회신(굴패각집하장설치)」(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23. 1. 9.)에 따르면 동 시설물 설치 운영에 따른 쓰레기 적법 처리대책,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등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굴패각으로 인해 매립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영 시 시설물 및 주변 해역에 폐기물(쓰레기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협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굴패각 집하장으로 공유수면 사용허가한 대상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협의 의견인 해양오염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굴패각으로 인해 매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에 폐기물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07. 12. 27.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 까지 굴폐각 집하장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한 ○○면 ○○리 ○○-○지선과 ○○-○지선(4,399㎡)에 대해서 쓰레기 적법 처리대책과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시행계획을 제출받지 않고, 해역이용협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공유수면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다.

한편 감사기간('23. 3. 7. ~ 3. 22.) 중 ○○면 ○○리 ○○-○지선 및 ○○-○지선(4,399㎡)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 사용허가지 주변에는 폐구조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면 ○○리 ○○-○지선과 ○○-○지선의 위성사진과 로드뷰를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4,399㎡ 면적 외에도 추가로 1,533㎡이 매립되어 해수면과 도로가 연결되어 점·사용 중이었다.

또한 당초 ○○○○계의 굴폐각 집하장이 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사용 및 매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1,533㎡)에서 비료 및 팔레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3. 1. 9. ○○면 ○○리 ○○-○지선(1,403㎡)의 변경허가를 승인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면 ○○리 ○○-○번지 지선은 ○○면 ○○리 ○○번지(지목: 답)로 해당 폐기물은 ○○○○의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 ○○면 ○○리 ○○-○번지 지선은 축제식 면허어장 구역 내로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을 야적한 것으로 굴폐각집하장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므로 해역이용협의 이행사항을 준수한다고 판단하여 현지

조사 시 굴폐각집하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변경허가를 처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유수면 추가 매립지(1,533㎡)는 2010. 11. 15.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기간 15년)를 득하여 이용중인 시설(굴폐각집하장)과 인접한 곳으로 허가 처분 후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2023. 1. 9. 변경허가 처분한 대상지와 다소 이격되어있고 축제식 면허어장 구역 내로 현지조사 시 해당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있었고, 추가 매립 행위는 축제식 면허어장 권리자의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피허가자가 보상 및 전담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과 ○○○○계에서 축제식 면허어장 구역 내로 양식장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을 야적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버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등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시행 대책을 제출받아 이에 따른 이행 점검을 해야 함에도 15년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리 ○○-○, ○○-○번지 일원에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해양오염 및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허가를 승인하였다는 고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추가 매립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기존 축제양식어장을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하는 처분기관이고,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원상회복)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지에 대해서 해역이용협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등에 따라 금연지도원¹⁾을 위촉 및 운영하고 있다.

2.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제1항,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금연]」 “2부 지역 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운영, III. 행정사항”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2항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②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③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④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Ⅳ.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2] 금연지도원 직무 및 자격 요건”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 채용계획을 수립 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채용공고를 통하여 추천 또는 지원을 받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제1항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면접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면서 채용공고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서류전형을 진행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 ○○. ○.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게 하지 않고, ○○○장 및 ○○○○담당이 거주지·응시연령·결격사유²⁾에 따른 자격 요건만으로 평정 및 확인하여 심사하였다.

2) 고성군 ○○○○과에서 채용공고를 진행할 때 자격요건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규정된 요건을 누락한 채 거주지제한, 응시연령, 결격사유로만 명시하였고, 그 결과 서류전형을 진행하면서도 채용 공고 시 명시한 자격 요건대로만 심사를 하였음

그 결과 최종합격자 4명 중 1명(○○○)³⁾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된 금연지도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20○○. ○○. ○○. 채용되어,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금연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금연지도원 직무 수행 교육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제5항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9조의5 제5항에 따라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 ○○. ○○.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2023 1. 2.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4명 중 3명⁴⁾이 이전에도 금연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었다는 이유로 그 3명에 대한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20○○. ○○. ○○. 최종합격자 4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합격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 ○○. ○○. 차순위 지원자인 ○○○이 추가 합격하였고, ○○○을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 3명(○○○, ○○○, ○○○)의 경우 일전에 금연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제1항에 규정된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어 결론적으로 자격 요건에 부합하였으나 ○○○의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없음

4) 2022. 12. 28. 위촉된 4명의 금연지도원 중 3명(○○○, ○○○, ○○○)의 경우 2023년 금연지도원 채용 이전에 4년~6년간의 금연지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음

4. 자원봉사자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6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따르면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Ⅳ.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② 금연지도원 직무 및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등 수당이 없는 형태로 근무하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공모 및 심사절차는 제외하지만 자격 기준⁵⁾은 충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모 및 심사절차는 제외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 ○. ○. ~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9명의 자원봉사자를 두 차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때 [표 1]과 같이 「국민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건강증진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금연지도원 위촉 현황

위촉연도	활동기간	활동방법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법부당사항
20○○	4월 ~ 12월	월 1~2회 금연구역 야간단속	자율방범대 ⁶⁾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자격 요건 미충족
				○○○	○○○○.○○.○○.	
				○○○	○○○○.○○.○○.	
				○○○	○○○○.○○.○○.	
				○○○	○○○○.○○.○○.	
				○○○	○○○○.○○.○○.	
				○○○	○○○○.○○.○○.	
				○○○	○○○○.○○.○○.	
				○○○	○○○○.○○.○○.	
20○○	1월 ~ 12월	월 1~2회 금연구역 야간단속	자율방범대	○○○	○○○○.○○.○○.	
				○○○	○○○○.○○.○○.	
				○○○	○○○○.○○.○○.	
				○○○	○○○○.○○.○○.	
				○○○	○○○○.○○.○○.	
				○○○	○○○○.○○.○○.	
				○○○	○○○○.○○.○○.	
				○○○	○○○○.○○.○○.	
				○○○	○○○○.○○.○○.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6)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업무 관련 법령, 지침 등 업무연찬 미숙에 있다고 하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였고 향후 관련 법령 검토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등을 위반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현 ○○○○과), ○○○○과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등에 따라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 제20조(자활근로)에 따르면 보장기관(고성군)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안내」를 통해 자활사업의 유형, 참여조건, 사업의 민간위탁 및 예산 등 자활사업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안내」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II. 자활근로사업, II-1. 자활근로사업(운영), 8. 사업유형별 세부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¹⁾은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하고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²⁾은 매출액이 총예산의 30% 이상 내지 못할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활사업안내」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II. 자활근로사업, II-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1. 매출 관리”에 따르면 사업실시기관은 매분기말 기준 사업단별 매출관련 보고서식 및 통장사본을 다음달 15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매출금의 적립 및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을 검토한 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1년간 운영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내지 못할 경우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 2. 1.~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표 1]과 같이 2020년 4개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폐지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없이 2021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1개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내지 못하였으나 2021년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이며, 향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2020년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

연도	유형	구분	총사업비(A)	매출액(B)	비율(B/A)	위법부당사항
2020	사회서비스형	○○○○○○○○	124,119,810	5,753,144	4.6	2021년 사업 계속진행
		○○○○○○○	143,130,471	3,787,095	2.6	
		○○○○○○○○○	204,040,835	3,574,400	1.8	
		○○○○○○○	72,334,727	3,863,228	5.3	
	시장진입형	○○○○○○○	253,828,126	59,147,330	23.3	2021년 유형 미변경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2]와 같이 2021년 2개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폐지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없이 2022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1개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내지 못하였으나 2022년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2] 2021년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

연도	유형	구분	총사업비(A)	매출액(B)	비율(B/A)	위법부당사항
2021	사회서비스형	○○○○○○○	293,789,852	20,390,907	6.9	2022년 사업 계속진행
		○○○○○○	215,902,160	5,316,500	2.5	
	시장진입형	○○○○○○○	219,252,980	55,194,000	25.2	2022년 유형 미변경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과 같이 2022년 5개의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지 못하였으나 폐지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없이 2023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표 3] 2022년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

연도	유형	구분	총사업비(A)	매출액(B)	비율(B/A)	위법부당사항
2022	사회서비스형	○○○○○○○○	162,338,331	14,856,849	9.2	2023년 사업 계속진행
		○○○○○○○○	274,311,814	16,456,616	6.0	
		○○○○○○	196,635,840	4,763,702	2.4	
		○○○○○○	131,861,349	10,823,706	8.2	
		○○○○○○○○	387,407,032	13,310,726	3.4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각 자활사업단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단을 폐지하여 정산한 매출액 등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지역자활사업 지원비로 정산³⁾하고, 폐지된 사업 대신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활센터와의 정기적 업무연찬과 소통 창구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을 기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매출액 등 정산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지역자활사업 지원비에 3:7 비율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 지원으로 활용함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위반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실무담당자 ○○○○과 ○○○○○○○○○○ ○○○, ○○○○과 ○○○○
○○○○○ ○○○, ○○○○과 ○○○○○○○○○○ ○○○(현 ○○○○과)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책임자 ○○○○과 ○○○○○○○○○○ ○○○, ○○○○과 ○○○○○○
○○○(현 ○○○○과)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이 제한된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등 11개 부서)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에서는 각종 공익사업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관내 법무사에 위탁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등기위탁’ 한다)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고성군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 분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비고
본 청	○○○○○○○	○○○○○	○○○○○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	○○○○○○○	○○○○○○○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23. 3. 22. 감사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는 [표 2]와 같이 7개의 법무사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고성군 관내 법무사 등록 현황

연번	소속회	성명	주소	비고
1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2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3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4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5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6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7	경남지방법무사회	○○○	○○ ○○○ ○○○ ○○○ ○○	

[출처 :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¹⁾」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지방의회의원 등과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2022. 6. 27.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관련 안내」 공문(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508호)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의 용역·물품구매 등)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²⁾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무용품 구매, 유인물 인쇄, 책자 발행, 식사 등 주로 거래하는 업체 등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지출의 절차) 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등에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고성군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성군 지출원은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를 집행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서약하는 서식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의회로부터 ○○○ 군의원의 배우자 ‘○○○ 법무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³⁾을 수령하고도 각 부서와 공유하지 않았고, 고성군 ○○○ 등 총 10개 부서에서는 [표 3]과 같이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 법무사’와 총 206건 98,258천 원의 등기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체결하였으며, ○○○·○○○○○○⁴⁾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위 부당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한 대가를 집행하였다.

[표 3] ‘○○○ 법무사’와 수의계약 내역(’20. 2. 1. ~ ’23. 3. 22. 감사일 현재)

(단위 : 원)

계약연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206	98,257,760	
2020	47	26,915,800	
2021	69	33,689,160	
2022. 1. 1. ~ 5. 18.	20	4,619,200	
2022. 5. 18. ~ 12. 31.	66	32,673,600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2023	4	360,0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주) 본청(○○○) 178건 90,521,960원 지출, ○○○○○○(○○○○○) 28건 7,735,800원 지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계약서가 붙지 않고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하여 발생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확인 공문

4) 고성군 본청 지출원은 ○○○ ○○○○, ○○○○○○ 지출원은 ○○○○○○ ○○○○○○

따라서 고성군이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탁하는 ‘청약’ 행위와 ○○○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대행한 것은 ‘계약’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계약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하였다는 고성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본청 ○○○ 겸 실무책임자 ○○○ ○○○○○○ ○○○ (현 ○○○)**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본청 지출원 겸 실무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감독책임자 ○○○ ○○○○○○○○ ○○○, ○○○ ○○○○○○○○ ○○○(현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한 **실무담당자 ○○○ ○○○○ ○○ ○○○(현 ○○○○○○, ○○○○○○), ○○○ ○○○○○○ ○○○, ○○○○ ○○ ○○○ 겸 실무책임자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한 **실무담당자 ○○○○○○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게 등기위탁 의뢰한 **실무담당자 ○○○ ○○○○○○○○ ○○○,**

○○○ ○○○○○○○○ ○○○, ○○○ ○○○○○○○○ ○○○(현 ○○○○
○○, ○○○),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 ○○○○○○
○○○, ○○○ ○○○○○○ ○○○(현 ○○○○○○○○, ○○○○○○), ○○
○○○ ○○○○○○○○ ○○○, ○○○○○○ ○○○○○○○○ ○○○, ○○○○○
○○○○○○○○○ ○○○, ○○○○○○ ○○○○○○○○ ○○○(현 ○○○○○○○○),
○○○○○ ○○○○○○○○ ○○○(현 ○○○), ○○○○○○ ○○○○○○○
○○○(현 ○○○○○○○○), ○○○○○○ ○○○○○○○○ ○○○, ○○○○○
○○○○○○○○○ ○○○, ○○○○○○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6】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육성 지원 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에 따라 ○○ ○○○ 선수들의 훈련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표 1]과 고성군 ○○○에 ‘○○○○ 육성 지원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1] 2020~2022 ○○○ 육성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연도별	보조사업자	예산액	보조금 주요 용도	비고
○○○○ 육성 지원 사업	2020	고성군○○○	507,000	○○ 및 ○○ 인건비, ○○참가비 (숙박비, 식비), 피복비, ○○용품, 차량 유류비 등	
	2021	고성군○○○	663,000		
	2022	고성군○○○	763,873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 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에 따르면 출장여비 등을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고성군○○○의 보조사업을 정산 검사할 때에는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비를 일괄 인출 후 사후정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여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만큼 환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지원 사업비를 정산검사 하면서 개인차량 유류비 집행, 정산 증빙자료 중복첨부, 보조금을 인출 후 사후정산, 세금계산서 미징구, 여비 집행 부적정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는데도 수행상황을 점검해 시정 등의 명령을 하거나 정산 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개인차량에 유류비 집행

고성군○○○에서는 ○○○○○○○ 통학을 위한 공용차량을 임차하거나 공용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 개인차량 ○○○○○○○(○○○○○), ○○○○○○○ 개인차량 ○○○○○○○(○○○○○) 차량¹⁾을 ○○○○○○○ 통학차량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및 2022년 보조사업비로 147회에 걸쳐 총 17,997천 원의 경유를 개인차량에 부적정하게 주유하였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위 147회 주유 중 ○○○○○○○○○○○○○○○○○○○도 아닌 ○○○○○○○○○○○○○○○○○○○ 협회 ○○○○○○○(고성군 ○○○○○○○ 운영) 개인차량 ○○○○○○○○○(○○○○○)에 [표 2]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2,110천 원의 경유를 부적정하게 집행²⁾한 사실을 감사기간('23. 3. 14. ~ 3. 22.) 중 확인하였다.

[표 2] ○○○○○ 고성군○○○협회 ○○○○○ 개인차량 주유 내역

(단위 : 천 원, 리터)

일 자	차량번호(소유주)	주유량	금액	주유소	비고
합 계	25회	1,099.3	2,110		
'22. 5. 7.	○○○ ○○○○(○○○)	26.4	50	○○○주유소	
'22. 5. 24.	○○○ ○○○○(○○○)	25.7	50	○○○주유소	
'22. 5. 31.	○○○ ○○○○(○○○)	50.3	100	○○○○주유소	
'22. 6. 7.	○○○ ○○○○(○○○)	25.1	50	○○○주유소	
'22. 6. 10.	○○○ ○○○○(○○○)	25	50	○○○주유소	

1) 통학차량 현황 자료 요구에 따라 고성군○○○에서 ○○○○○○○○, ○○○○○○○○○2개 차량을 제출
2) 이에 대해 ○○○○○ 고성군○○○협회 ○○○○○는 본인차량[(○○○○○○○○○○(○○○○○○))]을 ○○○○○ 선수단에 빌려 주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

일 자	차량번호(소유주)	주유량	금액	주유소	비고
'22. 6. 11.	○○○ ○○○○(○○○)	47.7	100	○○주유소	
'22. 6. 16.	○○○ ○○○○(○○○)	48.6	100	○○○주유소	
'22. 6. 25.	○○○ ○○○○(○○○)	47.7	100	○○○주유소	
'22. 7. 4.	○○○ ○○○○(○○○)	47.8	100	○○○주유소	
'22. 7. 9.	○○○ ○○○○(○○○)	47.8	100	○○주유소	
'22. 7. 12.	○○○ ○○○○(○○○)	48.9	100	○○○주유소	
'22. 7. 19.	○○○ ○○○○(○○○)	49.5	100	○○○주유소	
'22. 7. 22.	○○○ ○○○○(○○○)	51.4	100	○○○○	
'22. 7. 28.	○○○ ○○○○(○○○)	51.6	100	○○○주유소	
'22. 8. 3.	○○○ ○○○○(○○○)	52.6	100	○○○주유소	
'22. 8. 9.	○○○ ○○○○(○○○)	53.7	100	○○○주유소	
'22. 8. 18.	○○○ ○○○○(○○○)	28.0	50	○○○주유소	
'22. 8. 23.	○○○ ○○○○(○○○)	58.1	100	○○○○○○	
'22. 9. 6.	○○○ ○○○○(○○○)	56.5	100	○○○주유소	
'22. 9. 26.	○○○ ○○○○(○○○)	56.5	100	○○○주유소	
'22. 9. 30.	○○○ ○○○○(○○○)	33.9	60	○○○주유소	
'22. 10. 13.	○○○ ○○○○(○○○)	56.0	100	○○○주유소	
'22. 10. 28.	○○○ ○○○○(○○○)	55.7	100	○○○주유소	
'22. 11. 6.	○○○ ○○○○(○○○)	27.3	50	○○○주유소	
'22. 11. 21.	○○○ ○○○○(○○○)	27.5	50	○○○주유소	

[출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재구성]

2) 피복 등 각종 물품 구입 시 증빙자료 중복 첨부

고성군○○○에서는 선수단 피복, 야구공 등 각종 물품을 [표 3]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17,180천 원 구매하면서 물품구매 증빙자료로 과거 납품사진을 재첨부하는 등 실적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을 감사 기간('23. 3. 14. ~ 3. 22.) 중 확인하였다.

[표 3] 증빙자료 중복 첨부 내역(동일 납부사진 재첨부)

(단위 : 천 원)

지출일자	건명	수량	금액	거래처	위반사항 확인
합 계	8회		17,180		
'20. 7. 3.	○○ ○○○ 유니폼	60	4,800	○○○○○○○○	'20.2.14. 구매한 ○○○ ○○○ 착용 사진첨부 (사진 배경이 겨울임)
'20.12.31.	○○ ○○○ 패딩 점퍼	30	5,400	○○○○○○○○	'20.2.14. 패딩 점퍼 및 조끼를 60벌 구매 후 '20.1월 ○○○○○○○○ 숙소 ○○○○○○○○○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을 첨부하였고,

지출일자	건명	수량	금액	거래처	위반사항 확인
'20.12.31.	○○○○ 바람막이	30	3,300	○○○○○○○○	'20.12.31. 60벌을 추가 구매하면서 '20. 1월 ○○○○○○○○ 숙소 ○○○○ ○○○○ 배경(2019년)의 단체사진을 재첨부
'21. 3. 13.	○○○○ 트레이닝복	8	1,280	○○○○ ○○○	'20.1.23. ○○ ○○○트레이닝복 사진과 동일사진을 재첨부
'21. 8. 31.	○○○ 구입	12	600	○○○○○	'21.4.19. ○○○ 구매 건과 동일사진 재첨부
'21. 12. 2.	○○○ 구입	12	600	○○○○○	'21.4.19. ○○○ 구매 건과 동일사진 재첨부
'22. 6. 14.	○○○ 구입	12	600	○○○○○	'22.3.30. ○○○ 구매 건과 동일사진 재첨부
'22. 10. 7.	○○○ 구입	12	600	○○○○○	'22.7.13. ○○○ 구매 건과 동일사진 첨부

[출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재구성]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사업비로 ○○○(○○○, ○○○, ○○○)의 각종 피복비로 총 150,885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 중 143,685천 원은 납품사진이나 배부내역 등 정확한 증빙자료도 없이 촬영일자와 구매수량도 확인할 수 없는 단체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으며, 2020년 ○○○ ○○○의 경우 선수단 25명³⁾에게 계획(각 2벌씩 총 50벌 지급)과 달리 80벌을 구매하였음에도 배부내역 첨부하지 않는 등 물품구매에 대한 증빙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을 감사 기간('23. 3. 14. ~ 3. 22.) 중 확인하였다.

3) 보조금 인출 후 사후정산 형태의 회계처리

고성군○○○에서는 2021년 ○○○○○ 육성 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 하계훈련과 ○○○○○○○○○○○○○○○○○○○ 초등 ○○○대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2021. 7. 13. 보조금 계좌에서 2,000천 원을 고성군○○○ 타 계좌로 인출한 후, 중등 ○○○ 하계훈련비로 총 1,850천 원을 집행하고 같은 해 9. 2. 잔액 150천 원을 다시 보조금 계좌로 반납하는 등 사후정산 형태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고성군○○○에서 제출한 선수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 ○○○은 25명으로 확인됨

4) 세금계산서 미징구

고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표 4]와 같이 세금계산서 징구도 없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부가가치세 1,839천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

[표 4]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지출일자	건명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	비고
합계	계	20,232	1,839	
'20.1.22	○○○ ○○○○○○○○ 숙박 및 식대	4,472	406	
'20.6.26.	○○○ ○○○○○○ 등 구입	6,400	582	
'20.6.26.	○○○ ○○○○○○ 등 구입	8,700	791	
'22.5.3.	○○ 운영물품 구입 (○○○)	660	60	

[출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재구성]

5) 수당 형태로 여비 부적정 지급

고성군○○○에서는 직원 출장여비는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출장대장,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지급단가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표 5]와 같이 ○○○ ○○ ○○○ 등 5명의 직원에게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개인별 200천 원에서 300천 원의 여비를 매월 급여지급 시 수당⁴⁾ 형태로 총 16,8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5] 수당 형태로 여비 부적정 집행내역(2020~2022)

(단위 : 천 원)

성 명	계	○○○	○○○	○○○	○○○	○○○	비고
여비 부적정 지급액	16,800	5,800	3,300	1,500	4,000	2,200	

[출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재구성]

4) 근로계약서 상 연봉 외 별도 수당에 관한 사항은 없음

3. 물품 분할 수의계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10. 민간이전(307목)’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구매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가 단일사업으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단 피복을 구입·계약하면서 [표 6]과 같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11건과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는데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타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16,915천 원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물품 분할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지출일자	건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방법	비고
합 계	15건	140,965			
'20년 소계	11건	87,485			
'20.1.22.	○○○ ○○○○○ 등 구입	6,400	○○○○○	1인 수의	
'20.1.23.	○○○ ○○○○○ 등 구입	4,800	○○○○○	1인 수의	
'20.1.31.	○○○ ○○ 등 구입	12,000	(주)○○○○○○○○○	1인 수의	
'20.1.31.	○○○ ○○○ 구입	4,800	○○○○○	1인 수의	
'20.1.31.	○○○ ○○○ 구입	3,600	○○○○○	1인 수의	
'20.1.31.	○○○ ○○ 및 ○○ 구입	9,000	(주)○○○○○○○○○	1인 수의	
'20.2.14.	○○○ ○○○○ 등 구입	17,400	○○○○○○○○○	1인 수의	
'20.6.26.	○○○ ○○○○○ 등 구입	6,400	○○○○○	1인 수의	
'20.6.26.	○○○ ○○○○○ 등 구입	8,700	○○○○○	1인 수의	
'20.7.3.	○○○ ○○○ 구입	4,800	○○○○○○○○○	1인 수의	
'20.12.31.	○○○ ○○○○ 등 구입	9,585	○○○○○○○○○	1인 수의	
'21년 소계	4건	53,480			
'21.3.10.	○○○ ○○○○○○○○ 등 구입	20,300	(주)○○○○○○○○○	1인 수의	
'21.3.10.	○○○ ○○○○○○○○ 등 구입	17,400	(주)○○○○○○○○○	1인 수의	
'21.3.10.	○○○ ○○○○○○○○ 등 구입	14,500	○○○○○○○○○	1인 수의	
'21.3.13.	○○○ ○○○○○○ 구입	1,280	○○○○○ ○○○	1인 수의	

[출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재구성]

5) 예산절감 가능액 : 계약금액 140,965,000원 - (총 예정가격 140,965,000원 × 88%) = 16,915,800원

4.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가 지방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로부터 2020년 ○○○○○ 육성지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일('20. 12. 31.)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받지 않고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도 넘긴 2022. 1. 13.이 되어서야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같은 해 1. 24. 정산검사를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매월 내지 분기별 확행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정산 검사 시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보조금법에 기준하여 엄중하게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복비 분할 1인 수의계약 건은 ○○○○○ ○○○, ○○○, ○○○○학교 ○○○, ○○○ 팀별 별도로 예산이 측정되며,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동절기와 하절기 등 시기별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분할 구매하였고 향후 2인 이상 건적 수의계약이 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 육성 지원 사업은 ‘고성군○○○’ 하나의 보조사업자이고 ○○○, ○○○ 등 선수단별 구매품목과 수량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별 별도로 예산이 측정되어 분할 구매하였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아이들의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동·하절기 피복을 구분하여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동절기 피복비 58,000천 원, 2021년 동절기 피복비는 53,480천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시기별로 분할구매를 위해 1인 수의계약 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등을 위반하여 ○○○○○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현 ○○○), ○○○○○○ ○○○○○○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 ○○○○○○ ○○○, ○○○○○○ ○○○○○○○○ ○○○(현 ○○○),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 ○○○ ○○○○도 아닌 ○○○ 고성군○○○협회 ○○○○ 개인차량 ○○○ ○○○○(○○○○)에 주유한 총 2,11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개인차량 유류비 집행, 증빙자료 중복 첨부, 수당형태 여비집행,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고성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성군
○○○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공용차량 임차 및 차량운행
일지 작성·관리, 피복 등 물품 시 지급내역 및 증빙사진 첨부, 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여비 집행 등 보조금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등 3개 부서)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 ○○○○과는 센터 내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 ○○○○○과의 요청에 따라 가축 소독약품, 정부양곡 포장재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인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2.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항에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3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3조(2단계 경쟁 대상)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기준 제4조(2단계경쟁 예외) 제2항에 따르면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기준 제10조(가격 제안)에는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 ○○○○과와 ○○과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품의 선호도가 우선시 될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 ○○과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 선정 제품 등의 사유로 조달청 2단계 경쟁 예외 승인도 받지 않고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에 분할하거나 업체를 특정하여 총 8회에 걸쳐 구매 요청하였고, 고성군 ○○○○○○ ○○ ○○○○○과에서는 2단계 경쟁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과의 요청 그대로 총 8회 591,226천 원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부적정하게 구매하였다.

[표 1]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내역(○○○ 구입)

(단위 : 천 원)

계약일자	건 명	품명	구입금액	업체명	비고
합 계	8회		591,226		
'20. 6. 5. '20. 6. 23.	○○○○○○○ 구입	보조사료 등 5종	60,800	○○○○ 외 1개사	분할 구매
'20. 6. 16.	○○○○○○○ 구입	따로분류되지않은 대사성의약품 등 3종	78,743	주식회사 ○○○○ 외 2개사	
'20. 10. 14.	○○○○○○○ 구입	살균제 등 2종	56,840	○○○ 외 1개사	
'20. 12. 30.	○○○○○○○ 구입	살균제 등 5종	101,995	주식회사 ○○○○○○ 외 2개사	
'21. 4. 7.	○○○○○○○ 구입	보조사료 등 5종	96,090	(주)○○○ 외 4개사	
'21. 6. 21.	○○○○○○○ 구입	살균제 등 2종	58,915	○○○○○○○○○○○ 외 1개사	
'22. 4. 15.	○○○○○○○ 구입	구충제 등 4종	71,367	(주)○○○○○○○○○ 외 3개사	
'22. 6. 3. '22. 6. 11.	○○○○○○○ 구입	살균제 등 7종	66,476	○○○○○주식회사 외 2개사	분할 구매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59,123천 원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총 계약금액 591,226천원 - (총 계약금액 591,226천원 × 90%*) = 59,123천 원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 제안 불가

3. 정부양곡 포장재 분할 수의계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구매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구매·공급 지침」에 따르면 금액 규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 추진·공급하되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물량 분할 발주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단일사업으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 ○○○○○과에서는 2022년 정부양곡 포장재를 구입하면서 [표 2]와 같이 총 48,880천 원의 단일사업(물품)을 2022. 4. 4., 같은 해 6. 3., 같은 해 10. 28. 총 3회로 분할하여 동일 업체인 (주)○○○○와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표 2] 2022년 정부양곡 포장재 분할 수의계약 내역(○○○○○○○ 구입)

(단위 : 천 원, %)

계 약 명	계약일	물품계약 금액			계약 업체	계약 방법	비고
		예정가격 (a)	계약금액 (b)	비율 (b/a)			
합 계		48,880	48,880	100			
○○○○○ ○○○○ 구매	'22. 4. 4.	21,840	21,840	100	(주)○○○○○	1인 수의	
○○○○○ ○○○○ 구매	'22. 6. 3.	21,840	21,840	100	(주)○○○○○	1인 수의	
○○○○○ ○○○○ 구매	'22. 10. 28.	5,200	5,200	100	(주)○○○○○	1인 수의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타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5,866천 원²⁾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및 ○○○○ 안전 사업 지침³⁾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여 관행대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정부양곡 포장재는 정부관리 양곡도정공장과 협의를 통한 가공지시 물량에 따라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 구매하면서 발생한 상황으로, 앞으로 관련

2) 총 계약금액 48,880천 원 - (총 예정가격 48,880천 원 × 88%) = 5,866천 원

3) 경상남도 ○○○○○에과 시군으로 시달한 사업지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및 ○○○ 안전사업지침에 ○○○○협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1회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임에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1회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특혜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정부양곡 포장재 분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연간 포장재 구매품목과 수량을 파악하여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단일사업(물품)을 동일 업체 (주)○○○○와 총 3회에 걸쳐 모두 1인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관리 양곡도정 공장 가공지시 물량에 따라 분할 구입하였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 ○○○○○○○ ○○○(현 ○○○), ○○○○○ ○○○○○○○ ○○○(현 ○○○○○), ○○○ ○○○○○○○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물품구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 **실무담당자** ○○○○○○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8】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료 징수 등 소홀

소 관 기 관 고성군(○○○○○○○)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2005. 6.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에 고성군 공유재산(고성군 ○○○ ○○○ ○○○○ 외 3필지 2,978㎡)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로부터 같은 법 제7조(기부채납) 등에 따라 2017. 6. 10. 놀이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2005. 5. 23.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 ㎡, 백만 원)

재산		유원시설						허가기간	사용료 /연	피허가자
소재지	면적	당초 설치				임의 설치				
		현재 존치		임의 철거						
		종류	금액	종류	금액	종류	금액			
계	2,978	4종	460	4종	350	3종	52	'05. 6. 1 ~ 현재까지 (매년 연장)	토지사용료 + 매출액 15%	○○○○○ 대표 ○○○
○○군 ○○면 ○○리 산1	503	바이킹 (‘05)	220	회전목마 (‘06)	60	범버보트 (‘16)	19			
○○군 ○○면 ○○리 1	1,378	우주전투기 (‘05)	50	스윙거 (‘17)	45	슬라이딩카 (‘19	18			
○○군 ○○면 ○○리 3	57	범퍼카 (‘05)	150	타가다 (‘22)	220	관람차 (‘21)	15			
○○군 ○○면 ○○리 산166-3	1,040	공룡열차 (‘05)	40	점프보트 (‘19)	25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부동산과 그 종물을 기부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05. 5. 23. 유기사설을 2017. 6. 10. 기부채납하겠다는 고성군과 ○○○○○○간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가 부동산과 그 종물을 기부한 자¹⁾가 아님에도 수의의 방법으로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허가하였다.

이로 인해 감사대상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만 [표 2]와 같이 최대 119,709천 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2] 재정 손실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관리 위탁료 ²⁾ (수입원가-지출원가)①	공유재산 사용료 (실제 징수액)②	재정 손실액 ①-②	비고
합계	187,916	68,207	119,709	
2021	126,150	39,627	86,523	
2022	61,766	22,800	38,966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1) ○○○○○○는 유기사설(종물)을 12년 사용한 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였을 뿐 부동산과 그 종물을 기부한 자가 아님

2) 기부채납 받아 관리위탁하였을 경우 입찰 기초금액*으로서 고성군에서 징수가 가능한 예상 수입
* 기초금액 = 수입원가 - 지출원가

3. 기부채납 관련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따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심의회의 업무)에 따르면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05. 5. 23. 고성군과 ○○○○○가 체결한 ○○○○○○ 내 ○○○○ 동산 조성사업 협약체결약정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II. 사업추진내용에 따르면 놀이기구 8종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사용일('05. 6. 10.)로부터 12년 경과('17. 6. 10.) 시 놀이시설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협약서에 따라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기부채납 대상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로부터 [표 3]과 같이 바이킹 등 8종의 유기사설을 2017. 6. 10. 기부채납 받기로 2005. 5. 23. ○○○○○와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인 회전목마 등 4종을 ○○○○○가 임의로 철거하였음에도 철거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당초 기부채납 대상 유기사설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계	현재 존치(설치년도)					임의 철거(철거년도)					비고
		소계	바이킹('05)	우주전투기('05)	범퍼카('05)	공룡열차('05)	소계	회전목마('06)	스윙거('17)	타가다('22)	점프보트('19)	
금액	810,000	460,000	220,000	50,000	150,000	40,000	350,000	60,000	45,000	220,000	25,000	납품업체 계약금액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고성군 ○○○○○에서는 지방재정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검토와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부채납 받기로 한 위 유기사설을 기부채납 받지 않기로 2017. 12. 26.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아울러 고성군 ○○○○○에서는 2020. 8. 20. ○○○○○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면서 반납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위 유기사설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을 다시 삽입하고 해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연장하고 있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가 [표 4]와 같이 임의로 신규 설치한 범퍼보트 등 3종³⁾의 유기사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앞으로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표 4] 신규 유기사설 임의 설치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계	범퍼보트('16.3.)	슬라이딩카('19.5.)	관람차('21.4.)	비고
금액	51,500	19,000	17,500	15,000	* ○○○○○ 통장 거래 내역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사용료 미징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 고성군 ○○○○○에서는 2005. 7. 29. ○○○○○에 8종의 유기사설에 대해 사용허가 하였고, 2006. 3. 8.부터 2022. 9. 29.까지 4종의 유기사설 철거와 2016. 3. 31.부터 2021. 4.14.까지 3종의 유기사설 신규 설치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였음

제22조(사용료)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여 사전에 징수하고, 운영 수익 부분에는 매출액의 15%를 사후 정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성군 ○○○○○○에서는 (재)○○○○○○○○○○○○○○○○○○조직위원회(이하 ‘○○○ 재단’이라 한다)와 2021. 9. 24., 2022. 9. 28.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2022년 ○○○○○○○○○○○○○○○○○○○(이하 ‘○○○’라 한다) 기간에는 ○○○ 재단(이사장 고성군수)에서 ○○○○○○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 기간 ○○○○○○ 운영수익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15%를 사후 정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가 2021년과 2022년 ○○○○○○ ○○○○ 기간에 물고기 잡기 게임장⁴⁾을 설치·운영하여 [표 5]와 같이 17,300천 원 정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는데도 사후 정산하여 사용료 2,595천 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표 5] 사용료 미징수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금봉어	게임 수(2미/인)	게임비(매출액)	미징수 사용료	비고
합계	8,650미	4,325명	17,300천원	2,595천원	게임비 4,000원/인
2021	4,800미	2,400명	9,600천원	1,440천원	
2022	3,850미	1,925명	7,700천원	1,155천원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는 기부채납 시 유기사설의 노후화,

4) 물고기 10마리를 잡으면 2마리를 주는 게임으로 게임당 4천원 지불하는 방식

직영 시 운영효율성, 「관광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유기사설 관리위탁 불가 규정 등의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영업시설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릉○○○ 개최 시에는 업무를 겸직하며 고생한 직원들로서 선처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고성군 ○○○○○○에서 유기사설의 노후화나 운영 효율성 우려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유기사설에 대해 기부를 받지도 기부채납을 받을 의향이 없으면서 2005. 5. 23.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고성군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가 아닌 다른 관광사업자를 선정하여 유기사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으므로 고성군을 관광사업자로 오인한 고성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제20조(사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겸 실무책임자** ○○○○○○ ○○○○○○ ○○○(현 ○○○)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제20조(사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 ○○○○○○○○ ○○○(현 ○○○○), **감독책임자 겸 실무책임자** ○○○○○○ ○○○○○○○○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담당자** ○○○○○○ ○○○○○○○○ ○○○, ○○○○○○○○ ○○○○○○○○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③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고성공룡
세계○○○ 기간 ○○○○○에서 물고기 잡기 게임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운영수익에 대한 사용료 2,595천 원은 추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
니다.(시정)

【일련번호 : 19】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 연안정비사업 보험정산 및 설계변경 검토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1. 28. (주)○○○○○○○ ○○○○○와 도급액 34백만 원에 ‘○○○○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 6. 24. ○○○○(주) ○○○○○과 도급액 734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2. 6. 28. 착공하고 2023. 3. 20. 준공하였다.

[표 1] ○○○○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1. 1.28.	○○면 ○○리 386-5	실시설계 1식	34	34	-	'21. 2. 1. ~ '21. 5. 1.	(주)○○○○○○○ 대표 ○○○	100%
연안정비 사업	'22. 6.24.	○○면 ○○리 386-5	데크설치 L=241.5m B=1.5m	342	314	28	'22. 6.28. ~ '23. 3.20.	○○○○(주) 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험정산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르면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따르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거나 보험료 감액분을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22. 12. 14. ‘○○○○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표 2]와 같이 보험료 14,634천 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금액의 증가율이 10%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여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았다.

[표 2] 감액보험료 공사비 사용으로 인한 설계변경 심사대상 제외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계약일 (준공일)	설계변경일	보험료 정산 (정산일)	총도금액			설계변경 증가율(%)	
				당초	변경 (보험료 감액 포함)	정당	변경 (보험료 감액 포함)	정당
○○○○ 연안정비사업	'22. 6.24. ('23. 3. 20.)	'22.12.14.	△14,634 ('22.12.14.)	734,015	801,872	816,506	9.24	11.24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승인전 시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 연안정비사업’ 특별시방서 제4절 페인트칠 편에는 방청(부식방지) 대책으로 초벌칠, 재벌칠, 세벌칠로 구성된 페인트칠 공법을 제시하고 있고 설계 내역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 및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을 묻는 등 기술검토를 하고, 경제적인 시공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을 묻는 등 기술검토를 하고 경제적인 시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22. 12. 14. ‘○○○○ 연안정비사업’의 연안 데크 강재 파일 등 방청(부식방지)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하면서 [표 3]과 같이 총 110,312천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도 설계자의 의견을 묻는 등 기술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유지관리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통해 경제적인 시공인지 확인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단순 출장복명만하고 설계변경을 하였다.

[표 3] 방청(부식방지) 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단위 : 천 원)

구분		도급액			비고
		계	순공사비	제경비	
계		증110,312	증89,063	증21,249	
변경전	방청 페인트칠	691,560	465,550	226,010	
변경후	용융아연도금	801,872	554,613	247,259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고성군 ○○○○○에서는 2022. 12. 14. ‘○○○○ 연안정비사업’의 데크 설치 위치 조정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하면서 [표 4]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의 변동이 발생하였는데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¹⁾ 없이 2023. 1. 16. 데크 시공을 시작하여 같은 해 3. 20. 설치 완료하였다.

[표 4]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변경 내역

(단위 : m²)

구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비고
	계	당초	추가(증)	제척(감)	
면적	396	680	증57	(감)341	
내용	L=200m 광장 확장, 대피소 추가	L=240m	광장 확장, 대피소 추가	L=40m(감)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찬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을 위반하여 ‘○○○○ 연안정비사업’의

1) 고성군 ○○○○○에서는 2023. 3. 7. 감사 지적에 따라 2023. 3. 15.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음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험료 정산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0】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산림사업 하자검사 부적정 및 안전관리계획 누락 등

소 관 기 관 고성군(○○○○○)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에서는 [표 1]과 같이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산림사업(2020년~2023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계	239건	20,355	
2020	○○○○ ○○○ 조성사업 등 75건	4,666	
2021	○○○○○○○○○ 조성사업 등 78건	9,131	
2022	○○○○ ○○○ 조성사업 등 85건	6,519	
2023	○○○ ○○○○	39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하자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3.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하자검사를 할 때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하자가 발견 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22. 7. 5.부터 2023. 1. 19.까지 하자검사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 ○○○○○호선 가로수식재사업 등 55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진기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

[표 2] 하자검사 미작성 내역

(단위 : 천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검사결과	하자검사일	검사자
55건	6,852,890			
○○○ ○○○○○○○○ ○○○식재사업 등 2건	168,361	이상없음	'22. 7. 5.	○○○
○○○○○ ○○○ ○○○○ 조성사업	125,618	이상없음	'22. 7. 14.	○○○
○○○○○년 ○○○○ ○○○ 조성사업 등 3건	1,005,799	이상없음	'22. 12. 1.	○○○
○○○○○○○○○ ○○○ 정비공사 등 14건	1,273,060	이상없음	'23. 1. 10.	○○○
○○○○○ ○○○ ○○○ 조성사업 등 10건	1,024,983	이상없음	'23. 1. 12.	○○○
○○○○○○○○○ ○○○○ 조성사업 등 10건	1,619,897	이상없음	'23. 1. 17.	○○○
○○○○○년 ○○○○ 관리사업 등 7건	355,256	이상없음	'23. 1. 18.	○○○
○○○○○년 ○○○ ○○○○ 개선사업 등 8건	1,279,916	이상없음	'23. 1. 19.	○○○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특히 고성군 ○○○○○에서는 1일 최대 14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등 제대로 된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표 3]과 같이 ○○○ ○○ ○○○○○ 가로수

식재사업 등 3건의 공사의 경우 총 21주의 수목이 고사하였음에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보수를 하지 못하는 사실을 감사기간('23. 3. 14. ~ 3. 22.) 중 확인하였다.

[표 3] 하자검사 만료 사업장 하자검사 부적정 내역

(단위 : 천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만료일	검사일	검사자	감사자 확인	
					수량	금액
3건	465,170				21주 고사	4,194
○○○ ○○○○○○선 가로수 식재사업	148,731	'22. 7. 30.	'22. 7. 5	○○○	동백나무 2주 고사	1,003
○○○○ ○○○ ○○○○ 조성사업	125,618	'22. 7. 31.	'22. 7. 5	○○○	동백나무 3주 고사	310
○○○○년 ○○○○ ○○○ 조성사업	190,821	'22. 12. 13.	'22. 12. 1	○○○	동백나무 14주, 느티나무 2주 고사	2,881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보험정산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르면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르면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따르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고, 보험료 감액분을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22. 2. 16. ‘고성군○○○○○ 실내정원 조성 사업’의 설계 변경을 하면서 [표 4]와 같이 보험료 3,266천 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금액의 증가율이 10%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여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았다.

[표 4] 감액보험료 공사비 사용으로 인한 설계변경 심사대상 제외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계약일 (준공일)	설계변경일	보험료 정산 (정산일)	총도금액			설계변경 증가율(%)	
				당초	변경 (보험료 감액 포함)	정당	변경 (보험료 감액 포함)	정당
○○○ ○○○ ○○ ○○○○ 조성사업	'21.11.18. ('22. 3. 21.)	'22. 2.16.	△3,266 (22. 2.16.)	741,467	815,415	818,681	9.97	10.41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안전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을 준공할 때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에서는 2022. 2. 15.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표 5]와 같이 산림사업 14건을 수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11건만 수립하여 그 중 3건만 승인하였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준공 이후 종합보고서를 1건만 제출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부적정하게 이행하였다.

[표 5]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적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 금액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교육		종합 보고서 제출	담당 자
			수립	승인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14건		11건	3건	11건	0건	11건	0건	1건	
○월~○월○○○○○○○○사업 (○○○○○○지구)(2차분)	'22.02.15. (22.5.4.)	137,584	수립	승인	일일 1회 월간 1회 분기 1회 취약기 1회	월간 2회	일일 1회 월 1회	정기 2회	미제출	○○○
○○○○○년○○○ 방제사업(○○○○○○○○리○○지 구)	'22.03.10. (22.4.2.)	26,150	수립	승인	월간 1회	월간 6회	월간 1회	월간 6회	제출	○○○
○○○○○년○○○ 방제사업(○○○○○○○○지구)	'22.03.10. (22.4.2.)	43,880	수립	미승인	주간 1회	주간 1회	주간 1회	주간 1회	미제출	○○○
○○○○○년 ○○○○○시설사업 (○○○○○~○○○○○○지구)	'22.03.17. (22.9.30.)	539,600	수립	승인	일일 1회 월간 1회 분기 1회 취약기 1회	월간 2회	일일 1회 월 1회	정기 8회	미제출	○○○
○○○○○년 ○○○○○○ 및 보수사업(○○○○○○○○외)	'22.04.26 (22.6.17.)	42,820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정기 0회 수시 0회	-	일일 1회 정기 7회	-	미제출	○○○
○○○○○년 ○○○○○ 신설사업 (○○○○○○지구)	'22.05.23. (22.8.31.)	157,732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정기 0회 수시 0회	-	일일 1회 정기 18회	-	미제출	○○○
○월~○월 ○○○○○ 복구사업(○○○○○○○○2지구)	'22.06.02. (22.7.7.)	63,359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정기 0회 수시 0회	-	일일 1회 정기 5회	-	미제출	○○○
○○○○○년 ○○○○○○○사업 (○○○○○○○○지구)	'22.07.01. (22.8.4.)	27,306	미수립	미승인	-	-	-	-	미제출	○○○
○○○○○ ○○○○○ 정비사업	'22.08.29. (22.11.4.)	43,878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	일일 1회 정기 8회	-	미제출	○○○
○○○○○ ○○○○○ 정비사업	'22.08.29. (22.11.4.)	39,209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	일일 1회 정기 8회	-	미제출	○○○
○○○○○년 ○○○○○ ○○○○○ 조성사업	'22.10.25. (22.1.30.)	280,200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월간 1회 분기 1회 취약기 1회	월간 1회	일일 1회 정기 2회 수시 3회 특별 3회	정기 3회	미제출	○○○
○○○○○년 ○○○○○○○○○ (○○○○○○○○지구 외)	'22.11.17. (22.12.26.)	48,546	미수립	미승인	-	-	-	-	미제출	○○○
○○○○○년 ○○○○○○○○○ (○○○○○○○○지구 외)	'22.11.17. (22.12.26.)	90,448	미수립	미승인	-	-	-	-	미제출	○○○
○○○○○년 ○○○○○보수사업 (○○○○○○~○○○○○○○○)	'22.11.17. (22.12.22.)	47,790	수립	미승인	일일 1회 정기 0회 수시 0회	-	일일 1회 정기 5회	-	미제출	○○○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고사율이 10% 미만으로 하자보수 의무 면제 대상이었기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23) 식재공통편 1.6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따르면 고성군에서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고사율 10% 미만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 지적된 고사 수목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구입하여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 하자보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성군 ○○○○○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23) 식재공통편 1.6 (12) 식재시기’에 따르면 식재 적기는 경남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서, ○○○ ○○○○○호선 가로수식재사업 등 2건¹⁾은 식재에 취약한 여름철에 공사를 시행하여 더욱 신중한 하자관리를 해야함에도 하자보수 면제 규정 해석을 착오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등을 위반하여 하자검사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 ○○○○ ○○○ ○○○(현 ○○○○○○○○), ○○○○○ ○○○○○○ ○○○(현 ○○○○○)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 ○○○, ○○○○○ ○○○○○○ ○○○, ○○○○○ ○○○○○○○○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1) ○○○ ○○○○○호선 가로수 식재사업(20.6.2.~20.8.3) ○○○○ ○○○ 휴식공간 조성사업(20.5.26.~20.7.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직장 동호회 및 상조회 운영 회계처리 절차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직장 동호회 활성화 경비를 지원하고 보수 원천징수를 통해 고성군 직원 상조회(이하 ‘직원 상조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 ○○○에서는 여비 원천징수를 통해 각 부서별 상조회(이하 ‘부서 상조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직장 동호회 및 상조회 운영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명	내용	집행내역					비고
		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621,853	227,285	162,113	205,052	27,404	
○○과	직장 동호회 경비 지원	9,872	2,985	525	6,062	300	
	고성군 직원 상조회 운영	266,374	94,630	80,785	82,539	8,420	보수 원천징수
○○○	부서 상조회 운영	345,607	129,670	80,803	116,451	18,684	여비 원천징수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동호회 활성화 경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¹⁾ [별표 5]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5],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품의-원인행위-지출’ 순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다.

[표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연번	구분	내용
1	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2	원인행위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3	지출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재구성]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직장 동호회 활성화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품의-원인행위-지출’ 순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2020. 2.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동호회 활성화 경비를 집행하면서 [표 3]과 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동호회 활성화 경비 총 20건, 9,872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

1) 2021. 1. 1.시행('22. 1. 1. 개정 전)

하였고, 특히 2020년과 2022년 일상경비 출납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3] 동호회 활성화 경비 예산과목 부적정 내역

부서명	예산과목		집행내용	건수	금액(천원)
	현행	적정			
○○과	행사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동호회 행사 개최 및 대회 참여시 경비 지원 (인당 15천원, 300천 원 한도)	20건	9,872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동호회 활성화 경비 집행내역 [별첨 1] 참조

또한 고성군 ○○과에서는 동호회 활성화 경비를 집행하면서 [표 4]와 같이 사전 품의 없이 동호회 대표자 등의 소속 부서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도록 안내하였고, 동호회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일상경비출납계좌로 보전 지급하는 형태로 총 20건, 9,872천 원을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4] 동호회 활성화 경비의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내역

처리주체	처리내용	처리 순서	
		현행	적정
동호회	대표 또는 총무 소속 부서의 신용카드 사용(원인행위)	1	2
○○과	청구금액에 대한 지출 품의(품의)	2	1
○○과	해당 부서 일상경비출납계좌로 보전 지급(지출)	3	3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상조회비 운영 및 여비 집행 부적정

가. 상조회비 운영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보수지급기관은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²⁾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등³⁾을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정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관리) 및 [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다만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등⁴⁾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는 회계부서에서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⁵⁾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고 필

2)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 ①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③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① 신용카드·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②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읍·면·동의 경우, ③ 그밖에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5) 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

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소속 직원 보수에서 상조회비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수 아닌 여비를 원천징수하거나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지급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통예금계좌는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운영하되 계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 검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원천징수 동의서 미징구 부적정

그런데도 고성군 ○○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표 5]와 같이 2020. 2. 1.부터 2023. 1. 26.까지 원천징수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직원 상조회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1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총 282,404천 원을 부적정하게 원천징수하였다.

[표 5] 원천징수 동의 없이 직원 상조회비 원천징수 부적정 내역

(단위 : 천 원)

원천징수대상	구분	계	소계	'20년	'21년	'22년	'23년
전 직원	원천징수 금액	290,714	282,404	92,210	95,350	94,844	8,310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여부		미제출				제출 ('23. 1. 27.)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② 여비 원천징수 부적정

고성군 ○○○에서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표 6]과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 ~ 2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부서 상조회비 계좌로 지급 처리하는 등 총 296,070천 원의 여비를 부적정하게 원천징수 및 지급 처리하였다.

[표 6] 여비 원천징수 및 부서 상조회비 계좌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원천징수 및 지급처리 부적정 금액				
	계	'20년	'21년	'22년	'23년
○○○ (부서 상조회)	296,070	108,900	76,890	93,340	16,94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③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개설·관리 부적정

고성군 ○○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상조회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표 7]과 같이 사업 운영 등 불가피한 목적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서와 ○○과에서는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감사부서에 전수조사를 요청하여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7] 상조회 목적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개설·운영 부적정 내역

순번	부서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용도	개설일자
1	○○과	지역○○○	○○○-○○-○○○ ○○○	고성군청	직원 상조회	
2	○○○○과	○○은행	○○○-○○○○-○ ○○○-○○	고성군○○○○○○○	부서 상조회	
3	○○소	○○은행	○○○-○○-○○○ ○○○	○○○○○○○	부서 상조회	
4	○○면	지역○○○	○○○○○○○-○○- ○○○○○○○	○○○○○○○	부서 상조회	
5	○○면	○○은행	○○○○○○○-○○- ○○○○○○○	○○○○○○○	부서 상조회	
6	○○면	지역○○○	○○○○○○○-○○-	○○○○○○○	부서 상조회	

순번	부서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용도	개설일자
			○○○○○○			
7	○○면	지역○○○	○○○○○○-○○-○○○○○○	○○○○○○○	부서 상조회	
8	○○면	지역○○○	○○○○○○-○○-○○○○○○	○○○○○○○	부서 상조회	
9	○○면	지역○○○	○○○-○○○○○-○○○○-○○	○○○○○○○	부서 상조회	
10	○○면	○○은행	○○○-○○○○○-○○○○-○○	○○○○○○○	부서 상조회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내여비 과다지급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준용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 추진계획’⁶⁾에 따르면 2022. 3. 7.부터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 시군의 복무업무 시스템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인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출장

6)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 추진계획 안내(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060호(21.12.16.), 경상남도 인사과-4673호(22.2.21.))

여비 산출 및 지급 업무를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관내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하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2022. 3. 7.부터 도입된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통해 여비 산출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에서는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통한 여비 산출 및 정산 절차 없이 여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2022. 1. 1.7)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여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8]과 같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거나,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자에게 실비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여비를 지급하는 등 총 567건, 5,87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감사기간('23. 3. 14. ~ 3. 22.) 동안 확인하였다.

[표 8]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금액단위 : 천 원)

구분	계		4시간 미만 출장자에 2만원 지급		2km 이내 근거리 출장에 정액 여비 지급	
	건수	과다지급액	건수	과다지급액	건수	과다지급액
○○○ (‘22. 2. 1. ~ ‘23. 2. 28.)	567	5,870	226	2,260	341	3,61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검토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동호회 지원 예산은 추경에 바로

7) 고성군 ○○○에서는 수기로 여비를 산출·정산하여 e호조로 지출하고 있어, 감사기간(23. 3. 14. ~ 3. 22.) 중 감사 대상 기간 전체의 여비 집행내역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삭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조회 운영 및 여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보통예금
계좌 부적정 내역 10건에 대해서는 계좌 해지 조치토록 하고 반기별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8조의2 등을 위반하여 직장 동호회 활성화 경비
집행 및 직원 상조회비 원천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 ○○과 ○○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2 등을 위반하여 과다지급한 여비
5,870천 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시정)

③ 동호회 활성화 경비 집행 시 사전 품의 후 ○○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등 회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 2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지방세 감면 부적정 및 부과 누락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¹⁾를 미신고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부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며 감면 받은 이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미사용 등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 및 추정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2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²⁾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1) 도세 및 시군세 등을 말하며, 도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과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³⁾에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 포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중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르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이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 12. 31.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같은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취득세 감면업무를 할 때에는 2021. 1. 1.부터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 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 1. 1.) 이후 설립된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3) 2020. 1. 15. 신설되었으며 2021. 1. 1.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표 1]과 같이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2020. 1. 1. 이후 설립한 농업 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 ○○○) 등 12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총 316,301천 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하여 2022.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총 24건, 439,969천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표 1] 농업법인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 내역

(금액 단위 : 천 원)

납세자	회사설립 등기일	취득일	추징사유	감면세액	추징세액(예정)			비고
					계	취득세 등	재산세	
계(12개 법인, 24건)			316,301	439,969	436,433	3,536		
○○○○○○○ ○○○	'14. 2.19.	'21. 4.9.	취득당시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21.6.8.등록)	182,824	276,578	274,047	2,531	* 정당자격 : 취득 당시 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한해 감면 가능
○○○○○○○ ○○○○○	'17.12.14.	'21.1.11.	취득당시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5,684	9,240	8,674	566	
○○○○○○○ ○○○○○○○	'20. 2. 6.	'21.8.25.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20,996	31,103	31,103	-	
○○○○○○○ ○○○○○	'21.11.23.	'21.11.22.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14,241	20,409	20,409	-	
○○○○○○○ ○○○	'21. 8.20.	'21. 8.26.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437	631	631	-	
○○○○○○○ ○○○	'21. 1.27.	'21. 4. 2.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2,400	3,650	3,650	-	* 정당자격 : 취득 당시 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한해 감면 가능
○○○○○○○ ○○○	'21. 7.23.	'21. 9. 30.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22.10.28 등록)	1,633	2,376	2,376	-	
○○○○○○○ ○○○○○○○	'20.11.27.	'21. 4. 30.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6,175	9,403	8,964	439	

납세자	회사설립 등기일	취득일	추징사유	감면세액	추징세액(예정)			비고
					계	취득세 등	재산세	
○○○○○○○ ○○○	'21.10.19.	'21. 1. 10.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22.7.1. 등록)	38,264	55,155	55,155	-	
○○○○○○○ ○○○	'22. 3.28.	'22. 4. 12.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8,210	11,299	11,299	-	
○○○○○○○ ○○○	'22. 4. 18.	'22. 5. 4.	회사설립등기일 이후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현재까지 미등록)	7,125	9,840	9,840	-	
○○○○○○○ ○○○	'21.12.14.	'22. 7. 4.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22.6.23. 등록)	28,312	10,285	10,285	-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고성군 ○○과에서는 ○○○ 외 1명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21. 11. 16. ○○면 ○○리 ○○○-○번지 소재 3,767㎡ 토지와 1,642㎡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18,677천 원을 감면받고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등 [표 2]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총 2건 45,208천 원을 2022.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고 있다.

[표 2] 감면 부동산 해당 용도 미사용 추징 내역

(금액 단위 : 천 원)

납세자명	감면 사유	추징사유	취득일	감면세액	추징세액(예정)		
					계	취득세 ⁴⁾	농특세
계			2건	32,277	45,208	41,408	3,800
○○○ 외 1명	노인복지시설 운영 목적 부동산	1년 내 직접 미사용	'21.11.16.	18,677	24,485	22,725	1,760
○○○○○○○○ ○○○○	종교시설 건축 목적 부동산	3년 내 직접 미사용	'20.1.16.	13,600	20,723	18,683	2,040

[출처 : 고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3. 지목변경 등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4)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 등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에는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및 제21조(부족세액의 추정 및 가산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상속으로 인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자,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자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표 3]과 같이 농지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한 ○○○ 등 132명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총 30,192천 원을 직권으로 부과하지 않았고,

[표 3] 지목변경 취득세 추정내역

(금액 단위 : 천 원)

해당연도	납세자	추징세액(예정)		
		계	취득세 ⁵⁾	농특세
계	132명	30,192	27,447	2,745
2020	○○○ 외 75명	15,195	13,814	1,381
2021	○○○ 외 31명	5,850	5,318	532
2022	○○○ 외 23명	9,147	8,315	832

○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와 같이 2018. 1. 1.부터 2022. 9. 30. 까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등 45명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인⁶⁾들이 상속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2.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70건, 36,330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표 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추정 내역

(금액 단위 : 천 원)

과세 구분	피상속인	건수	추징세액(예정)		
			계	취득세 ⁷⁾	농특세 등
계	45명	70	36,330	33,125	3,205
2018	○○○ 외 2	4	1,969	1,815	154
2019	○○○	1	796	717	79
2020	○○○	1	137	125	12
2021	○○○ 외 1	6	974	887	87
2022	○○○ 외 37	58	32,454	29,581	2,873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5]와 같이 2018. 4. 1.부터 2023. 1. 30.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축조 신고한 임시건축물에 대해 확인한 결과 ○○○○○ 등 80명의 납세자가 존속기간이 1

5)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6) 고성군은 2023.4.19. 심의조서 작성일 현재까지 상속인 명단을 확인 중에 있음

7)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임

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하지 않았음에도 2022.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총 97건 219,335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5]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취득세 추정내역

(금액단위 : 천 원)

과세구분	납세자명	건수	추정세액(예정)		
			계	취득세	농특세
계	80명	97	219,335	201,948	17,387
2018	○○○○○ 외 8	9	33,836	31,115	2,721
2019	○○○○○○ 외 32	46	67,490	62,089	5,401
2020	○○○ 외 9	12	26,598	24,499	2,099
2021	○○○○○○○ 외 10	12	55,523	51,181	4,342
2022	○○○○○○○○ 외 16	17	35,357	32,577	2,780
2023	○○○	1	531	487	44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같은 법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납세의무자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에 따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8)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금액이 150,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과세관청이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근로자수, 월간보수총액, 평균보수총액 등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자료를 활용하여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000천 원을 초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누락된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표 6]과 같이 2021. 8. 1.부터 2022. 12. 31. 현재 까지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표자 ○○○) 등 5 개소의 사업주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 까지 총 53건, 69,394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6] 주민세 종업원분 추징 내역

(금액단위 : 천 원)

납세의무자	과세기간(횟수)	추징세액(예정)		
		계	본세	가산세
계(5개 기업, 53건)		69,394	55,423	13,971
○○○○○	2021.8. ~ 2022.12.(17건)	17,696	14,035	3,661
○○○○○	2022.4. ~ 2022.11.(8건)	18,598	14,967	3,631
○○○○○○○	2022.7. ~ 2022.12.(6건)	12,313	10,067	2,246
○○○○○	2021.6. ~ 2022.8.(15건)	12,300	9,438	2,862
○○○○○○○○○	2022.6. ~ 2022.12.(7건)	8,487	6,916	1,571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장조사 중심의 사후관리 부족과 지방세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신고대상 세목에 대한 안내 및 지방세 감면 시 감면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조사 중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을 위반하여 취득세를 부적정하게 감면하고 부과를 누락한 실무담당자 ○○○ ○○○○○○○○ ○○○, ○○○ ○○○○○○○○ ○○○, ○○○ ○○○○○○○○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 ○○○○ ○○ ○○○(현 ○○○), ○○○ ○○○○○○○○ ○○○(현 ○○), ○○○ ○○○○○○○○ ○○○과 실무담당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 ○○○○○○○○ ○○○(현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지방세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에 따라 취득세 부적정 감면액 총 26건 485,177천 원과 취득세 부과 누락분 등 총 352건 355,251천 원을 추징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보험료 미부과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등 14개 부서)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 등 14개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난에 따른 공유재산의 피해발생 및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신체·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연간 사용료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르면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심의회 업무)에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할 때에는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 ○○○○○○○○○에 공유재산(○○○ ○○○○○ ○○○, 53.4㎡)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¹⁾이 없는데도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없이 [표 1]과 같이 2020. 5. 6.부터 2022. 12. 31.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5. 6. 부적정하게 허가하였다.

1) 「고성군 ○○○○○○○○○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

[표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부적정 내역

신청일자 (허가일자)	재산구분	소재지	허가면적 (㎡)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20.3.3. ('20.5.6.)	행정재산 (군유재산)	○○○ ○○○○○ ○○○(○○○○○ ○)	53.4	고성군○○○○○○○○○○ (위원장 ○○○) *○○○○○ ○○○○○	'20.5.6.~ '22.12.31.	사무실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유재산 보험료(공제비) 미부과 등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서에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성군이 납부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 부담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고성군 ○○○○○○ 화장실’(○○○ ○○○ ○○○-○) 등 16건의 건물(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표 2]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미가입 내역

담당부서	건물 소재지	건축물명	연면적(m²)	비고
8개 부서	계(16건)			행정재산
○○○○과	고성군 ○○읍 ○○리 ○○○-○	○○○○○○○ 화장실	21.4	
○○○○과	고성군 ○○읍 ○○리 ○○○	○○○○○○ ○○○○○○ (화장실 포함)	1,328.5	
○○○○과	고성군 ○○읍 ○○리 ○○○-○	○○○○○○○○○ ○○ ○○○	91	
○○○○사업소	고성군 ○○읍 ○○리 ○○○	○○○○○○○○○○○○○○○	51.48	
○○○○과	고성군 ○○면 ○○리 ○○○○-○	○○○○○○○	75.9	
○○○○과	고성군 ○○면 ○○리 ○○○○	○○○○○○(○○○○○○○○○)	77.34	
○○○○○○과	고성군 ○○면 ○○리 ○○-○	○○○○○○○○○	98.28	
○○○○사업소	고성군 ○○면 ○○리 ○○○	○○○○○○○○○○○○○○○	215	
○○○○○○과	고성군 ○○면 ○○리 ○○○○-○	공유재산[(폐)○○○○○○○]	844.17	
○○○○과	고성군 ○○면 ○○리 ○○○-○	○○○○○○○ 관리동 및 화장실	43	
○○○○과	고성군 ○○면 ○○리 ○○○	○○○○○○○○○○○	165.32	
○○○사업소	고성군 ○○면 ○○리 ○○○-○	화장실(○○○○○○○)	83.64	
○○과	고성군 ○○면 ○○리 ○○○○-○	구. ○○○○○○○○	68.69	
○○○○과	고성군 ○○면 ○○리 ○○○-○	○○○○○○ ○○	59.55	
○○○○과	고성군 ○○면 ○○리 ○○○-○	○○○○○○	414	
○○○○○○과	고성군 ○○읍 ○○리 ○○○-○	○○○○○○○ ○○○○	26.4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고성군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표 3]과 같이 ○○○○○ 등 총 17건의 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2020. 1. 1.부터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 기간 중 3년간 보험료(공제비) 14,692천 원을 고성군에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표 3] 공유재산 보험료 사용자 미부과 내역

(단위 : 원)

부서	건물 소재지	건축물명	면적 (㎡)	사용자	납부액		
					2020	2021	2022
9개 부서	계(17건, 14,692,710원)				2,372,050	6,051,500	6,269,160
○○○○과	○○읍 ○○리 ○○○-○	○○○○○○○○지하(○○○○○)	440.64	○○○○○	542,750	542,750	542,750
○○○○과	○○읍 ○○리 ○○	○○○○○○○○ 분관2층(○○○○○○○○사무실(○○○○))	313.4	○○○○○○○○	-	2,501,010	2,501,010
○○○○과	○○읍 ○○리 ○-○○	○○○○○○○○○ (사용용도:○○○(○○○○))	1049.04	○○○○○ ○○○○○ (회장 ○○○)	-	323,630	323,630
○○○○과	○○읍 ○○리 ○○○-○○	○○○○○○○○○○ ○○○○○○	210.84	○○○○○○○○○○ ○○○○ ○○○	17,310	17,310	17,310
○○○○과	○○읍 ○○리 657-1, 657-5	○○○○ ○○○○○ (○○○,○○○,○○○ 등)	199	○○○	-	530,180	530,180
○○○○과	○○읍 ○○○○로 ○○○	○○○○○ 2층 (고성군○○○○○ 사무실)	53	고성군 ○○○○○○○○	9,680	29,060	29,060
○○○○과	○○읍 ○○○○로 ○○○	○○○○○ 2층 (○○○○○○○○○○ 사무실)	53.00	고성군 ○○○○○○○○○○	19,370	29,060	29,060
○○○○과	○○읍 ○○○○로 ○○○	○○○○○ 2층 (○○○○○○○ 사무실)	263	○○○○○○○	146,780	146,780	146,780
○○○○과	○○읍 ○○○○로 ○○○	○○○○○ 관리동 (고성군○○○○○○○ 사무실)	20	○○○○○○○○○○	10,370	10,370	10,370
○○○○과	○○면 ○○리 ○○○-○	○○○ 및 일반음식점	426.62	고성군○○○○○○○○○	364,780	364,780	336,030
○○○○과	○○면 ○○리 ○○○-○	○○○○	595.41	○○○○ ○○ 15명	449,260	449,260	449,260
○○○○과	○○면 ○○리 ○○○-○○	○○○○	825.75	○○○○ ○○ 27명	732,790	732,790	732,790
○○○○과	○○면 ○○리 ○○○-○	○○○○○○○○	66.56	○○○○○○○ ○○○	17,310	17,310	17,310
○○○○과	○○면 ○○리 ○○○-○	○○면 ○○○○○○○○ 사무실	86.58	○○○○○ ○○○○○○○○○	25,560	43,700	43,700
○○○○과	○○면 ○○리 ○○○-○	○○○○	66.2	○○○○○○○ ○○○	23,540	23,540	23,540
○○○사무소	○○면 ○○리 ○○○-○	○○면사무소 2층 (○○○ ○○○○ 사무실)	52.80	○○○○○○○○○ ○○○ ○○○○	12,190	44,200	44,200
○○○○과	○○읍 ○○리 ○○○ 외 ○○필지	○○○○ 내 식당 및 매점	498.73	○○○○○○○	-	245,410	491,82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군○○○○○○○○○○ 구성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근거로 무상사용허가 하게 되었고, 고성군 ○○○○과에서는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하고 운영경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등의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성군 ○○○○과에서 답변한 무상 사용을 허가한 근거조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고성군 ○○○○과에서 ○○○ ○○○○○○○○, ○○○○ 등에게 통보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성군이 별도로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고성군에 납부토록 손해보험 등의 비용부담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가 등의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해당 부서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보험료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 담당자** ○○○○○○ ○○○○○○ ○○○, ○○○○○○ ○○○○○○○○ ○○○ (현 ○○○○○), ○○○○○○ ○○○○○○○○○○○○○○○○○○○ ○○○, ○○○○○○ ○○○○○○○○ ○○○(현 ○○○), ○○○○○○ ○○○○○○○○○○○ ○○○(현 ○○○○○), ○○○○○○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법령에 근거없이 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고성군 ○○○○○○ ○○○)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16건 공유재산(○○○ ○○○ ○○○-○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허가한 공유재산 중 고성군에서 납부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3년간 총 보험료(공제비) 14,692천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 2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준공 처리하였다.

[표 1]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등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공사기간 (용역기간)	계약 상대자	공정률
				계	도급	관급	기타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1.19.	고성군 ○○읍 ○○리 ○○○- ○○ 번지 일원	진입도로 개설 L=220m	5,047	4,008	916	123	'21.11.17. ~ '22. 7. 2.	○○건설 대표 ○○○	준공 100%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0. 2.11.		산업단지 조성 132,270㎡	7,797	5,744	1,986	61	'20. 2.14. ~ '21. 9.28.	○○○○(주) 대표 ○○○	
○○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18.11. 9.		산업단지 조성 132,270㎡	726	726	-	-	'18.11. 9. ~ '21. 6.29.	○○ 엔지니어링 대표 ○○○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교량거더¹⁾ 특허공법 선정절차 및 평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성군 ○○○○○과(現 ○○○○○과)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교량거더 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2020. 5. 22. ○○○ 등 6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작성해 군수 방침을 득하였고, 2020. 5. 25. ~ 28.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교량 특허공법 선정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가위원들이 명확하게 평가(채점)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평가위원들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평가(채점)하여 적합한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교량거더 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2020. 5. 22. 수립한 계획서에는 [표 2]와 같이 총 7개의 평가항목 중 3개 평가항목은 평가(채점)할 구체적 근거 자료²⁾없이 군수의 방침을 받았고, 이후 2020. 5. 25. ~ 28. 서면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채점할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평가위원들은 5개 업체에 대해 각각 채점

1) 교량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말함

2) 평가계획서에는 5개 회사의 공법의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법사진, 공법개요 및 특징, 신기술 및 특허, 형고, 공사비, 회사명, 제작경로 등이 표기되어 있음

하였고, 또한 현장 적용성 항목은 형하공간의 적정성(형고3))을 확인해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위원 6명 중 모두 채점 오류가 있음에도 [표 3]과 같은 (주)○○○○의 교량거더 특허공법을 선정 및 설계에 반영해 1,471백만 원 비용을 들여 2022. 7. 2. 교량을 시공 완료하였다.

[표 2] 교량거더 특허공법 선정에 따른 채점 내역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채점 적정 여부
소계	7개 항목	100		5개 항목 채점 부적정
1	현장 적용성	20	형하공간의 적정성 등	평가위원 6명 모두 형고가 유리한 순으로 채점하지 않음
2	구조적 신뢰성	20	자재의 내구, 내화, 내습성 등	평가자료에 채점 가능한 근거 자료 없음
3	시공성	10	시공의 용이성	평가자료에 채점 가능한 근거 자료 없음
4	유지관리성	15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평가자료에 채점 가능한 근거 자료 없음
5	경제성	15	공사비 적정성 등	평가위원 1명은 경제성(가격) 채점 오류
6	신기술 및 특허	10	신기술 및 특허 유무	채점 적정
7	적용실적	10	시공실적 확인	채점 적정

※ 교량공법선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평가결과 [별표1] 참조

[표 3] 교량거더 특허공법 선정, 설계, 시공 내역

교량형식	특허업체	교량거더 물량	공사비*
합성형라멘	주)○○○○○○○ 대표 ○○○	교량 연장 92.2m (2경간 46.1m) 교량 폭 15.0m	1,471백만원

* 교량거더 공사비는 설계서에 사급자재대로 1,001백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재경비율 1.47을 적용함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형고는 교량 상부에 설치되는 거더의 두께를 말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⁴⁾ 제7조(사용기준)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이하 ‘시공자’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 제1항 나호에 따라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를 반영한 경우와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제8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준공정산 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용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1. 9월 준공되었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22. 7월 준공되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2020. 1.23. 시행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나. 위법부당한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 2022. 12. 22. 준공정산하면서 시공사[○○○○(주)]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신호수의 인건비⁵⁾를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으로 제출했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안전관리비 11,245천 원을 2021. 10. 12.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2022. 7. 13. 준공정산하면서 시공사[○○건설]가 2022. 11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의 안전관리 인건비 사용실적⁶⁾을 제출했음에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표 4]와 같이 안전관리비 4,387천 원을 지급하는 등 2건의 공사에 대해 총 15,632천 원을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4] 안전관리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공 사 명	지급일자 (정산일자)	안전관리비 과다지급액	준공정산 부서	시 공 자
합 계		15,632		2개 업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1.10.12. ('21.10.12.)	11,245	○○ ○○과	○○○○(주) (○○시 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2. 7.13. ('22. 7.13.)	4,387		○○건설 (○○군 소재)

※ 안전관리비 과다 지급 세부내역 [별표 2] 참조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4.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검사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5) ○○○○과는 2020.10.23. 시공자의 실정보고를 검토하면서 성토량 증가에 따라 신호수 인건비 26백만 원을 도급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수의 방침을 받았음

6)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자는 2022. 7. 13. 준공정산 시 2021. 11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고 발주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2021. 11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사용실적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같은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경식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 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검사한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성군 ○○과에서 시행한 2022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2023. 1. 5.)에 따르면 하자검사결과 하자여부에 따라 ‘이상없음’ 또는 ‘하자있음’으로 제출해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업체에 하자보수 지시 후 결과를 재무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검사조서에 하자여부에 따라 ‘이상없음’ 또는 ‘하자있음’으로 작성해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는 업체에 하자보수 지시 후 결과를 재무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인 2023. 2. 17. 현장을 확인한 바 [표 5]와 같이 식재한 조경수가 최소 43주(그루) 이상 고사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경계웬스가 전도되어 하자가 있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2023. 1. 27. 재무과에 제출한 하자검사조서에는 ‘이상없음’으로 작성하였고, 해당업체에 하자보수 지시와 결과 등은 별도로 재무과에 보고하지 않았다.

[표 5] 조경식재 등 하자 발생 및 검사 부적정 내역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발생내용 (발생기간)	조치여부	하자검사한 결과보고
2년 (‘21.9.28.~ ‘23.9.28.)	조경식재 43주(그루) 고사 (‘22년 10월)	‘22.10.12. 시공사에 보수 지시하였으나 ‘23. 3.22. 감시일 현재 미조치	‘22. 12. 27. 하자검사 시 ‘이상없음’으로 보고
	경계휨스 8m 전도 (‘22년 하반기)	‘23. 3.22. 감시일 현재 시공사에 보수 지시사항 없음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2022년도 정기 하자검사를 3건 실시하면서 [표 6]과 같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공무원⁷⁾은 하자검사를 실시한 당일 부서장에게 하자검사를 위해 출장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실제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날을 명기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표 6] 하자검사일 출장 결재 여부

구 분	공 사 명	준공일	하자검사 실시일	하자검사 결과	하자검사를 위해 출장 결재한 이력
합 계	3건			3건	3건
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1. 9.28.	‘22. 7.15.	이상없음	당일 출장결재 없음
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21. 9.28.	‘22.12.27.	이상없음 으로 표기	당일 출장결재 없음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2. 7. 2.	‘22.12.27	이상없음	당일 출장결재 없음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7) 당시 하자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2023. 3. 21. 문답하는 과정에서 하자검사조서에 표기된 날이 아닌 다른 날 하자검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음

5. 축중기 미설치 및 토석정보시스템 미이용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리) 제9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m³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3조(대상현장) 제1항 및 제7조(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에 따르면 사토·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⁸⁾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적용) 제2항, 제6조(정보관리 주체), 제12조

8)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항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최초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온라인 거래기능) 제2항, 제16조(매각 공고기능)에 따르면 발주청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온라인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리핑암, 발파암)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제공하며 발주청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m³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설계에 반영된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공사의 토석정보를 입력 및 활용하여야 하고 대규모 순성토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의 사토 정보와 온라인 거래 기능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에서는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순성토량이 [표 7]과 같이 77,291m³에 달하는 대규모 토사를 운반하는 현장임에도 시공자가 설계에 반영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토사를 운반하는 24톤 덤프트럭 총 6,663대⁹⁾의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시공자가 설치하지 않은 축중기 비용 1,019천 원을 감액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없이 2021. 9. 28. 준공처리 하였다.

[표 7] 토사운반 덤프트럭 대수 및 축중기 미설치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부서	사 업 명	순성토량 (m³)	토사운반에 사용된 덤프트럭(24톤)	축 중 기	
				설치여부	설계반영액
○○○○과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77,291	6,663대	미설치	1,019

※ 축중기 설계반영액은 재경비를 포함한 비용임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순성토량이 77,291m³에 달하는 대규모 토사를 반입하는 현장임에도 [표 8]과 같이 토석정보시스템의 인근지역 사토정보, 반입시기, 반입조건 등을 이용 및 활용하지 않아 토사 운반거리 10km, 21km 조건으로 반입해 시공자에게 토사 운반비용 1,152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토석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표 8] 토사운반 및 토석정보시스템 미이용 내역

(단위 : 천 원)

공 종	운반조건	수량(m³)	순공사비	재경비율	공 사 비	비 고
합 계		77,291	711,092		1,151,969	토석정보시스템 미이용 및 미활용
토사운반	L=21km, 덤프24톤	73,291	690,108	1.62	1,117,975	
	L=10km, 덤프24톤	4,000	20,984	1.62	33,994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3. 3. 22. 감사일 현재 토석정보시스템 및 관련부서에서 확인한 토석 반입 정보는 [표 9]와 같으며,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를 반입한 2020. 2월부터 2021. 2월까지 고성군 관내 21km 이내 토석 반입 가능한 현장은

9) 덤프트럭의 운반대수를 계산하면 토사의 단위중량은 1.8로 적용, 운반시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환산계수 1.15 적용하면 24톤 덤프트럭 1대에 적재 토사량은 24톤/(1.8×1.15) = 11.6m³임
따라서 순성토량 77,291m³/11.6m³ = 덤프트럭 총 6,663대임

총 5개소로 확인되는데도, 인근 공사현장의 토석을 반입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표 9] ○○산업단지 조성공사 인근 토석반입 가능한 현장

공 사 명	공시위치	운반 거리	발주청	사토량 (m³)			토석 반출시기	비고
				계	사토	풍화암		
○○~○○(1) 도로 확포장공사	고성군 ○○면 ○○리 ○○○○	16km	경상남도	6,875	6,875		'19. 3월 ~'24. 4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사반입 시기 '20. 2월 ~ '21. 2월
○○~○○ 국도건설공사	고성군 ○○면 ○○리 ○○○-○	15km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4,536	-	4,536	'20. 6월 ~'24. 5월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고성군 ○○면	8km	고성군청	17,220	17,220	-	'18. 3월 ~'21.11월	
○○○○○○○ 진입도로 확장공사	고성군 ○○면 ○○리	18km	고성군청	15,59 3	15,361	232	'19. 6월 ~'20. 6월	
○○ 소하천 정비사업	고성군 ○○면 ○○리	18km	고성군청	4,800	4,800		'20. 1월 ~'21. 8월	

[출처 : 토석정보시스템 및 고성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6.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없이 공사 추진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라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안전관리)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등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절차)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하면 승인하여 시공자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시공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표 10]과 같이 진입부 교량 설치를 위해 높이 9.6미터의 흙막이 지보공 설치하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건설공사임에도 시공자로 하여금 착공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적정성 검토 및 승인없이 교량을 시공하는 등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2021. 9. 28. 조성공사를 준공 처리하였다.

[표 10]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승인여부
산업단지 접속 라아멘 교량 설치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높이 9.6m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시공사 미제출 발주청 미승인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표 11]과 같이 총공사비가 78억 원으로 품질시험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공사를 착공한 2020. 2. 14.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18개월 경과한 2021. 9. 28. 준공시점인 2021. 9. 9. 시공자에게 품질시험계획을 승인 처리하였다.

[표 11] 품질시험계획수립 승인일, 공사 착공 및 준공일 내역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여부	공사 착공일 품질시험계획 승인일	공사 준공일	승인처리 지연 개월수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총 공사비가 77억원으로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임	착공일 '20. 2. 14. 승인일 '21. 9. 9.	'21. 9.28.	18개월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7.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¹⁰⁾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설계변경)에 따르면 지질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 암반선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암판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암반량을 확인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2021. 12. 1. 등에 터파기 공사 시 암반선이 노출되었음에도 암판정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암반량을 확인해 [표 12]와 같이 설계 변경하여 26,010천 원을 증액하였다.

[표 12]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내역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착공일 (암노출일)	설계 변경일	토공 순공사비			재경 비율	증액 공사비
			당초	변경	증액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0.11.23. ('21.12. 1.)	'20.11.23.	41,739	59,433	17,694	1.47	26,010

※ 토공 순공사비는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등의 합계한 순공사비임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5,578	3,981	-	1,597	6,386	4,024	-	2,362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41,739	4,892	-	36,847	59,443	4,945	-	54,498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 공사 재경비율 : 47%

1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실무책임자 ○○○○○과 지방○○○○○ ○○○(현 ○○○사무소), ○○○○○과 지방○○○○○ ○○○(현 ○○○○사업소), 당시 감독책임자 및 특허공법 심의위원 ○○○○○과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 감독책임자 ○○○○○과 지방○○○○○ ○○○(현 ○○○○○○○○○○○○○○○○○), 당시 특허공법심의 평가위원 ○○○○○과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15,632천 원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하여 축증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치비용을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1,019천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교량공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평가결과

1.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배점비율			
				수(1업체)	우(1업체)	미(2업체)	양(1업체)
현장 적용성	20	형하공간의 적정성 등	상대평가	20	18	16	14
구조적 신뢰성	20	자재의 내구,내화, 내습성 등		20	18	16	14
시공성	10	시공의 용이성		10	9	8	7
유지관리성	15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15	13.5	12	10.5
경제성	15	공사비 적정성 등		15	13.5	12	10.5
신기술 및 특허	10	신기술 및 특허 유무	절대평가	신기술및특허 10점 / 실용신안 6점 / 없음 0점			
적용실적	10	시공실적 확인		1천건 이상 10점 / 500건 이상 8점 100건 이상 6점 / 50건 이상 4점			

2.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위원)	배점	합성 라멘	강합성 라멘	HY-R 라멘	Hicom 라멘	D플렉스 라멘	채점 결과
현장 적용성	20	1.6m	1.8m	1.5m	1.5m	1.7m	형하공간의 적정성 등
○○○		18	16	20	16	14	채점 오류
○○○		20	15	16	18	14	채점 오류
○○○		20	16	18	16	14	채점 오류
○○○		20	16	16	18	14	채점 오류
○○○		20	20	15	15	10	채점 오류
○○○		20	18	16	14	14	채점 오류
구조적 신뢰성	20	평가자료에 채점할 근거 자료없음					자재의 내구,내화, 내습성 등
○○○		20	18	14	16	16	구체적 평가 자료 없이 채점
○○○		20	18	16	18	14	
○○○		16	16	20	18	14	
○○○		20	14	16	18	16	
○○○		20	20	15	15	15	
○○○		16	16	18	18	16	
시공성	10	평가자료에 채점할 근거 자료없음					시공의 용이성
○○○		9	10	8	8	7	구체적 평가 자료 없이 채점
○○○		10	8	6	8	7	

평가항목 (평가위원)	배점	합성 라멘	강합성 라멘	HY-R 라멘	Hicom 라멘	D플렉스 라멘	채점 결과
○○○		9	8	10	7	8	
○○○		10	8	9	7	8	
○○○		10	5	10	10	5	
○○○		10	8	10	10	8	
유지관리성	15	평가자료에 채점할 근거 자료없음					유지관리성 동이정릉
○○○		13.5	15	12	13.5	10.5	구체적 평가 자료 없이 채점
○○○		15	13.5	10.5	10.5	12	
○○○		13.5	12	10.5	15	12	
○○○		13.5	15	12	12	13.5	
○○○		15	15	10	10	5	
○○○		15	13.5	12	12	13.5	
경제성	15	85만원/m²	75만원/m²	86.5만원/m²	107만원/m²	109만원/m²	공사비 적정성 등
○○○		13.5	15	12	12	10.5	채점 적정
○○○		15	12	13.5	12	12	채점 오류
○○○		13.5	15	12	12	10.5	채점 적정
○○○		13.5	15	12	12	10.5	채점 적정
○○○		13	15	13	10	10	채점 적정
○○○		13.5	15	12	10.5	10.5	채점 적정
신기술 및 특허	10	유	유	유	유	유	신기술 및 특허 유무
○○○		10	10	10	10	10	채점 적정
○○○		10	10	10	10	10	
○○○		10	10	10	10	10	
○○○		10	10	10	10	10	
○○○		10	10	10	10	10	
○○○		10	10	10	10	10	
적용실적	10	1,098건	273건	521건	151건	54건	적용한 현장실적 확인
○○○		10	6	8	6	4	채점 적정
○○○		10	6	8	6	4	
○○○		10	6	8	6	4	
○○○		10	6	8	6	4	
○○○		10	6	8	6	4	
○○○		10	6	8	6	4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안전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1. 공사명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8,730천원	
'21년 6월	안전 관리비	작업자보호 건설장비 유도신호수	3,600천원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공사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 반영된 경우
'21년 5월	안전 관리비	작업자보호 건설장비 유도신호수	3,780천원	
'21년 4월	안전 관리비	작업자보호 건설장비 유도신호수	1,350천원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8,730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480천원	(①) × 5.5%
③ 이 윤	1,013천원	(①+②) × 11%
④ 공 급 가 액	10,223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022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11,245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사명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3,147천원	
'21년 11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3,147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3,147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188천원	(①) × 6.0%
③ 이 윤	500천원	(①+②) × 15%
④ 공 급 가 액	3,835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384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168천원	(④+⑤)× 4%
⑦ 과 다 지 급 액	4,387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 2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사업소 등 5개 부서)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7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표 1]과 같은 준공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다.

[표 1] 건설공사 준공정산 절차

순 서	준공정산 절차	주 요 내 용
① 정산서류 제출	시공사→사업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시공자가 실제 사용한 실적 제출
② 정산서류 확인	사업부서	시공자가 발주청에 정산을 위해 제출한 사용실적 확인
③ 계약 변경	시공사↔계약부서	계약금액에 계상된 정산 항목 중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후 변경계약 체결
④ 대가지급	계약부서→시공사	정산 및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 대가지급

[출처 : 고성군의 준공정산 절차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¹⁾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이하 ‘시공자’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포함된 인건비²⁾ 등에 대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제8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를 준공정산 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호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환경관리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 제1항 1호 (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따라 살수차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말한다.

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한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2022. 11. 4. 준공정산하면서 시공자[○○○○건설(주)]가 2022.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하지 않은 ○○○의 안전관리 인건비 360천 원의 사용실적³⁾을 제출했음에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사업소 등 5개 부서 7개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24,862천 원과 환경관리비 18,818천 원 등 총 43,680천 원을 시공사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공 사 명	지급일자 (정산일자)	과다 지급액			준공정산 부서	시 공 자
			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합계	7건		43,680	24,862	18,818	5개 부서	7개 업체
1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2. 11. 4. ('22. 11. 4.)	15,327	14,522	805	○○○○ 사업소	○○○○건설(주) (○○시 소재)
2	○○○○○○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20. 4. 24. ('20. 3. 26.)	8,607	6,194	2,413	○○ ○○과	○○건설(주) (○○시 소재)
3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립공사(건축)	'22. 5. 19. (기성 4회), '22. 9. 8. (기성 6회)	15,039	0	15,039	○○ ○○과	(주)○○○○건설 (○○시 소재)
4	고성군 ○○○○○○ 건립공사(1차분)	'21. 1. 29. ('21. 1. 13.)	1,761	1,761	0	○○ ○○과	(주)○○○건축 (○○시 소재)
5	고성군 ○○○○○○○건립공사	'20. 6. 19. ('20. 6. 4.)	1,101	1,101	0	○○ ○○과	(주)○○○○○토건 (○○시 소재)
6	○○○○○○○○○ 프로젝트사업○○○○○○○ 건립공사(건축-1차분)	'21. 6. 29. ('21. 6. 23.)	723	723	0	○○ ○○○과	○○○건설(주) (○○군 소재)
7	○○○ ○○○○○○ 조성사업 (건축)(1차분)	'22. 12. 30. ('22. 11. 29.)	1,122	561	561	○○ ○○과	(주)○○○토건 (○○시 소재)

※ 과다 지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별표 1]

3)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공자는 2022. 11. 4. 준공정산 시 2022. 5월 일용노무자로 근무하고 발주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2022. 5월 안전관리 근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사용실적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음

※ ○○○○○○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시공사 ○○건설(주)는 2021. 8. 2. 폐업신고로 등록말소 됨
[출처 : 고성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등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준공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사업소 지방○○○○ ○○○
(현 ○○○○○과), ○○○○○과 지방○○○○ ○○○(현 지방○○○○○
○○○○○○○○○○사무소)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당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현 ○○○사무소), ○○○○○과 지방○○○○○ ○○○(현 ○○○○○과)과
당시 실무책임자 ○○○○사업소 지방○○○○○ ○○○, ○○○○○과 지방
○○○○○ ○○○(현 ○○○사무소), ○○○○○과 지방○○○○○ ○○○(현
○○○사무소)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24,862천 원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에게 과다 지급한 환경
관리비 18,818천 원의 회수방안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시공사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세부내역

1. 공사명 :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10,830천원	
'19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2명)	1,230천원	○○○ 외 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5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7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2명)	1,5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8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2명)	1,1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8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9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2명)	1,1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9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7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5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6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3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6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7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3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8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60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8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3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48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3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1,68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5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7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2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9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7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9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10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1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11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1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2년 5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3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2년 5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10,830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650천원	(①) × 6.0%
③ 이 윤	1,722천원	(①+②) × 15%
④ 공 급 가 액	13,202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320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14,522천원	④+⑤+⑥

[출처 :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환경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600천원	
'21년 7월	환경 관리비	차광망설치인부 (인건비 1명)	1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10월	환경 관리비	차광망설치인부 (인건비 1명)	1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1년 12월	환경 관리비	망설치 (인건비 1명)	120천원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2월 지급증빙서류 없음)
'22년 2월	환경 관리비	물청소 (인건비 2명)	240천원	○○○ 외 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2년 2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600천원	과다지급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36천원	(①) × 6.0%
③ 이 윤	95천원	(①+②) × 15%
④ 공 급 가 액	731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73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805천원	④+⑤+⑥

[출처 :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명 : ○○○○○○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4,620천원	
'19년 8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1,20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8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9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형틀목공(1명)	1,620천원	○○○ 외 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9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10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1,32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0월 지급증빙서류 없음)
'19년 11월	안전 관리비	장비신호수(1명)	48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4,620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77천원	(①) × 6.0%
③ 이 윤	734천원	(①+②) × 15%
④ 공 급 가 액	5,631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563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6,194천원	④+⑤+⑥

※ ○○○○○○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시공자 ○○건설(주)는 2021. 8. 2. 폐업신고로 등록말소 됨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환경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1,800천 원	
'19년 8월	환경 관리비	특별인부 (인건비 1명)	4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8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9월	환경 관리비	특별인부 (인건비 1명)	4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9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10월	환경 관리비	특별인부 (인건비 1명)	4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0월 지급증빙서류 미비)
'19년 11월	환경 관리비	특별인부 (인건비 1명)	4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1,800천원	과다지급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108천원	(①) × 6.0%
③ 이 윤	286천원	(①+②) × 15%
④ 공 급 가 액	2,194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219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2,413천원	④+⑤+⑥

※ ○○○○○○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시공자 ○○건설(주)는 2021. 8. 2. 폐업신고로 등록말소 됨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명 : ○○○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건립공사(건축)

가. 환경관리비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11,790천원	
'21년 6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2명)	840천원	○○○,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6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7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2,70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7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8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1,9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8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9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1,6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9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10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1,6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11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1,6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1년 11월	환경 관리비	신호수 및 청소(1명)	1,3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임금내역 증빙서류 없음)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11,790천원	신호수 및 청소인부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707천원	(①) × 6.0%
③ 이 윤	1,175천원	(①+②) × 9.4%
④ 공 급 가 액	13,672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367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15,039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4. 공사명 : 고성군 ○○○○○ 건립공사(1차분)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1,440천원	
'20년 7월	안전 관리비	신호수(1명)	2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7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8월	안전 관리비	신호수(1명)	3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8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10월	안전 관리비	신호수(1명)	2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11월	안전 관리비	신호수(1명)	36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0년 12월	안전 관리비	신호수(1명)	24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0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1,440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43천원	(①) × 3.0%
③ 이 윤	118천원	(①+②) × 8.0%
④ 공 급 가 액	1,601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60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1,761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5. 공사명 : 고성군 ○○○○○ 건립공사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900천원	
'19년 11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1명)	1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19년 12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1명)	750천원	○○○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19년 12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900천원	장비신호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7천원	(①) × 3.0%
③ 이 윤	74천원	(①+②) × 8%
④ 공 급 가 액	1,001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00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1,101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재구성]

6. 공사명 : ○○○○○○○○ 프로젝트사업 ○○○○○○○○ 건립공사(건축-1차분)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650천원	
'21년 5월	안전 관리비	개구부덮개(맨홀)고정 및 재설치 인건비	650천원	○○○ 외 2명 인건비 증빙서류 미비 (근거: '21년 5월 인건비 입금내역 없음)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650천원	증빙서류 미비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19천원	(①) × 3%
③ 이 윤	54천원	(①+②) × 8%
④ 공 급 가 액	723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0천원	공공임대주택 공사-부가가치세 없음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0천원	해당없음
⑦ 과 다 지 급 액	723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7. 공사명 : ○○○ ○○○○○ 조성사업(건축)(1차분)

가. 안전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420천원	
'21년 10월	안전 관리비	안전시설 설치(1명)	420천원	총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 전 관 리 비	420천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5천원	(①) × 6.0%
③ 이 윤	40천원	(①+②) × 11.9%
④ 공 급 가 액	498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49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14천원	3.22%
⑦ 과 다 지 급 액	561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나. 환경관리 인건비 과다지급 내역

1) 세부내역

년 월	지급 명목	지급 내역		세 부 내 용
		지 급 명 목	지급금액	
합 계			420천 원	
'21년 10월	환경 관리비	살수차인부 (인건비 1명)	140천원	총 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0월 임금내역 없음)
'21년 11월	환경 관리비	살수차인부 (인건비 2명)	280천원	○○○ 외 1명 인건비 과다지급 (근거 : '21년 11월 노무비명세서 재첨부 등)

2) 과다 지급액 산정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환 경 관 리 비	420천원	과다지급 인건비
② 일 반 관 리 비	25천원	(①) × 6.0%
③ 이 윤	40천원	(①+②) × 11.9%
④ 공 급 가 액	498천원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49천원	④ × 10%
⑥ 물가 변동 적용금액	14천원	3.22%
⑦ 과 다 지 급 액	561천원	④+⑤+⑥

[출처 : ○○○○과 제출자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토석발생 공사현장 축중기, 토석정보, 암판정위원회 등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등 8개 부서)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토 및 순성토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토석정보 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는 등 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2. 토석발생 공사현장 축중기 미설치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리) 제9항 에 따르면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m³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7조(축중기 설치 비용 반영 방법)에 따르면

축중기 설치 대상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발주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축중기 설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 등 5개 부서에서는 토석발생으로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축중기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해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축중기 설치비는 계약금액을 조정해 감액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고성군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축중기를 설치해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았고,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설치하지 않은 축중기 설치비 총 2,537천 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하고 준공 처리하였다.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토석발생 공사현장 축중기 미설치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업부서	공 사 명	공사기간	사토량 (m³)	순성토량 (m³)	축 중 기	
						설치여부	설계반영액
합계	4개 부서	6건				6건	2,537
1	○○○ ○○과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1.10월 ~ `22.12월	12,832	-	미설치	미반영
2	○○ ○○과	고성군 ○○○○○○ ○○○○○ 조성사업	`20. 6월~ `21.11월		37,980	미설치	미반영
3	○○과	○○○○○○○ 진입도로 확장공사	`18. 9월~ `21. 6월	15,593	-	미설치	1,841
4	○○과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6월~ `23. 6월	15,844	-	미설치	미반영
5	○○과	○○~○○간(2) 도로 확포장공사	`21.12월~ `24.12월	-	13,180	미설치	미반영
6	○○○ ○○○○ 사업소	○○○○○○○○○ ○○○○ 인프라구축사업(○○○○○)	`20.12월~ `21.12월	16,642		미설치	696

※ 축중기 설계반영액은 재경비를 포함한 비용임

[출처 : 고성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미이용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적용) 제2항, 제6조(정보관리 주체), 제12조(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항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서 최초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온라인 거래기능) 제2항, 제16조(매각 공고기능)에 따르면 발주청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온라인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리핑암, 발파암)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제공하며 발주청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 등 5개 부서에는 토석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매각공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 등 5개 부서에서는 이번 고성군 종합감사 기간에 토석 발생량이 대규모인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인한 바, [표 2]와 같이 ‘고성군 ○○○ 조성공사’ 등 10개 공사에 대하여 토석정보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사토량에 대한 온라인 매각공고를 하지 않은 등 예산이 절감되도록 활용하지 않았다.

[표 2] 토석정보시스템 미등록 및 사토매각 미공고 내역

연번	사업부서	공 사 명	사토량 (m ³)	토석정보시스템	
				시스템 등록일	사토매각 공고여부
합 계	5개 부서	10건		10건	10건
1	○○○○○○과	고성군 ○○○ 조성공사	29,699	미등록	미공고
2	○○○○○○과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2,832	미등록	미공고

연번	사업부서	공 사 명	사토량 (㎡)	토석정보시스템	
				시스템 등록일	사토매각 공고여부
3	○○○○과	○○○○○○○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 추가부지조성사업	15,913	미등록	미공고
4	○○과	○○저수지 개보수사업	34,952	미등록	미공고
5	○○과	○○○○지구 용수개발사업(1차분)	29,842	미등록	미공고
6	○○과	○○○○○○○ 진입도로 확장공사	15,593	미등록	미공고
7	○○과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844	미등록	미공고
8	○○○○○○○○ 사업소	○○○○○○○○ ○○○○ 인프라구축사업(○○○○○)	16,642	미등록	미공고
9	○○○○사업소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7,220	미등록	미공고
10	○○○○사업소	○○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0,469	미등록	미공고

[출처 : 고성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4. 암판정위원회 절차 없이 공사비 증액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암판정위원회는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 감독자, 외부전문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의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8조(암반선 확인)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 대비표 등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 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⁵⁾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즉시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중 암반선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암판정위원회 개최를 관련 절차를 이행해 암반량을 확인 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2021년 간선임도시설사업(고성 ○○~○○○○지구)’ 등 9건의 공사에 대하여 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 중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위원회 절차에 따라 암반량을 확인한 이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감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암반량을 확인해 설계 변경하여 429,262천 원을 증액하였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 다고 되어 있다.

[표 3]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부서	사 업 명	착공일 (암노출일)	절토 순공사비			재경 비율	증액 공사비
			당초	변경	증액		
합 계	9건		326,233	627,161	300,928		429,262
○○○○ 과	2021년 간선임도시설사업 (고성○○~○○○○지구)	'21. 4. 14. ('21. 5. 12.)	67,579	99,484	31,905	1.24	39,562
○○○○ 과	2022년 간선임도시설사업 (고성○○~○○○○지구)	'22. 3. 21. ('22. 4. 20.)	83,436	115,703	32,267	1.22	39,366
○○○○ 과	○○○○○○○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19. 5. 15. ('19. 9. 2.)	20,408	21,509	1,101	1.60	1,762
○○과	○○~○○간 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19. 6. 25. ('19. 8. 24.)	6,293	17,717	11,424	1.50	17,136
○○과	○○○○○○○ 진입도로 확장공사	'18. 9. 5. ('19. 9. 10.)	60,681	111,344	50,663	1.55	78,528
○○과	○○○○지구 용수개발사업(1차분)	'20.11.16. ('21. 5. 3.)	37,884	91,726	53,842	1.58	85,070
○○○○ 과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22. 6. 2. ('22. 7.19.)	1,287	3,933	2,646	1.62	4,287
○○○○ ○○○사 업소	○○○○○○○○○ ○○○○ 인프라구축사업 (○○○○○)	'20. 12. 3. ('21.12. 2.)	47,457	155,525	108,068	1.40	151,295
○○○○ 사업소	고성읍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 6. 1. ('21. 1.18.)	1,208	10,220	9,012	1.36	12,256

※ 절토 순공사비는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등의 합계한 순공사비임

※ 건설공사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별표] 참조

[출처 : 고성군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 등을 위반하여 토석발생 공사현장에 축중기를 미설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및 사토매각 미활용, 암판정위원회 절차 없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팀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건설과 지방○○○○○ ○○○(현 지방○○○○○○ ○○○○사업소), ○○○과 지방○○○○○○ ○○○, 실무책임자 지방○○○○○ ○○○(현 ○○○○사무소)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치비용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2,537천 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건설공사 암판정위원회 절차없이 공사비 증액 세부내역

사업명 : 2021년 간선임도시설사업(고성○○~○○○○지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8,616	6,376	0	2,040	9,673	6,223	0	3,45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67,579	8,155	0	59,424	99,484	7,959	0	91,525		

※ 공사 재경비율 : 24%

사업명 : 2022년 간선임도시설사업(고성○○~○○○○지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13,879	10,109	0	3,770	14,601	9,031	0	5,57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83,436	12,960	0	70,476	115,703	11,578	0	104,125		

※ 공사 재경비율 : 22%

사업명 : ○○○○○○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27,414	27,183	231	0	28,914	28,683	231	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20,408	19,952	456	0	21,509	21,053	456	0		

※ 공사 재경비율 : 60 %

사업명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283	157	0	126	681	157	0	524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6,293	186	0	6,107	17,717	186	0	17,531		

※ 공사 재경비율 : 50%

사업명 : ○○○○○○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65,989	63,286	1,974	729	69,579	61,956	2,903	4,72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60,681	53,128	2,587	4,966	111,344	53,272	3,806	54,266		

※ 공사 재경비율 : 55%

사업명 : ○○○○지구 용수개발사업(1차분)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변경설계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38,190	38,190	0	0	31,520	28,531	2,989	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37,884	37,884	0	0	91,726	28,494	63,232	0		

※ 공사 재경비율 : 58%

사업명 : ○○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토목)

시행부서 : ○○○○과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599	599	0	0	599	476	123	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287	1,287	0	0	3,933	1,023	2,910	0		

※ 공사 재경비율 : 62%

사업명 : ○○○○○○○○ ○○○○ 인프라구축사업(****)

시행부서 : ○○○○○○○○사업소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리핑암	연암	계	토사	리핑암	연암		
물량 (m³)	23,036	20,714	2,322	0	23,036	14,880	2,322	5,834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47,457	23,780	23,677	0	155,525	17,082	23,677	114,766		

※ 공사 재경비율 : 40%

사업명 : 고성군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부서 : ○○○○사업소

구분	당초설계 절토량				변경설계 절토량				암판정 위원회 구성일	암판정 절차 이행여부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계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물량 (m³)	845	845	0	0	845	565	0	280	미구성	미이행
순공사비 (천원)	1,208	1,208	0	0	10,220	807	0	9,413		

※ 공사 재경비율 : 36%

【일련번호 : 2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설치계획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사업소)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표 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 1]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3건 사업 현황

사업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타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면 일원	하수처리장 70톤/일 관로 7.94km 배수설비 187가구	6,158	4,405	1,435	318	'20. 12. 10.~ '23. 12. 31.	○○건설(주) 대표 ○○○	시공중 (25%)
○○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면 ○○리 일원	하수관로(D50~250) L=5.926km 배수설비 201가구	5,151	3,468	1,267	416	'21. 5. 31.~ '24. 5. 30.	(주)○○건설 ○○○	시공중 (50%)
고성읍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읍 ○○리 일원	하수관로(D80~200) L=4.56km 배수설비 72가구	2,302	1,468	594	240	'20. 6. 1.~ '23. 11. 29.	○○건설(주) ○○○	시공중 (70%)

[출처 :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2. 불필요한 하수관거 중복 매설계획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하며,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⁶⁾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불합리한 구간이 있거나 설계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불합리하게 압송관과 자연유하관을 중복매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장여건상 자연유하관만 설치해야 함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그에 따른 중복비용 22,972천 원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있다.

6)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하수관거 중복매설로 과다 설계 물량 및 공사비

공 사 명	매설위치	관경 (mm)	관로매설 연장(m)			공사비(천원)		
			당 초	조 정	증감	당 초	조 정	증감
합 계			471	279	감) 192	105,055	82,083	감)22,972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YT-N02-001	75	401	279	감) 122	60,715	42,243	감)18,472
○○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NO.9+13 ~ NO.13+3	150	70	-	감) 70	44,340	39,840	감) 4,500

[출처 :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3. 하수관거 매설구간 도로침하 발생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물을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영구 시설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제142조(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 설치사업의 시공자가 하수관거 매설 시공 이후 품질확보 상 미흡하거나 위해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고성읍 ○○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시공자가 공용중인 도로상에 하수관거를 매설한 이후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침하면적 60㎡(연장30m, 폭2m) 구간에 최대 5cm 침하가 발생하는 등 품질확보 상 미흡하고, 공용중인 도로(지방도○○○○호선)를 통행하는 차량에 다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성군 ○○○○사업소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반하여 ‘○○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설치계획 등 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사업소 지방○○○○○○ ○○○, ○○○○사업소 지방○○○○○○ ○○○, ○○○○사업소 지방○○○○○○ ○○○(현 ○○○○○과), ○○○○사업소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하수관거 중복매설 계획한 구간의 비용 22,972천 원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8】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리 ○○-○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9. ~ 2022. 5. (실시설계 2019. 4 ~ 2020. 7.)
- 사 업 비 : 8,500백만원(보상비 2,400, 시설비 6,100)
- 규 모 : 사회인 ○○○ 1면, 부지 31,270㎡
 - 본부석 1개소, 라커룸 2개소, 전광판 1개, 조명탑 6개소
 - 규 격 : 홈-투수(18.44m), 베이스간(27.43m), 홈-2루(38.5m), CF(105m), LF(95m), RF(95m)

가. 실시설계용역

고성군 ○○○○○과(현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농어촌 체육활동 환경개선과 동호회 친선·유소년 야구단 체육행사, 전지훈련팀 유치 및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고성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다.

[표 1] 고성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

용역명	사 업 량	사업비(천 원)	용역기간	용역회사	비 고 (현공정)
		도급			
고성군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사측량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129,708	2019. 4.24. ~ 2020. 7.17.	(주)○○ 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사현황

고성군 ○○○○과(현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 조성을 위해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2021년 1월 2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2] 고성군 ○○○ 조성사업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고성군 ○○○ 조성공사	고성군 고성읍	○○○ 부지 조성 A=31,270㎡	4,759	2,892	1,867	2021.10.27. ~ 2022. 6. 6.	(주)○○○건설 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고성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준공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과에서는 사회인 ○○○ 1면을 준공하고 2023년부터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군계획시설사업의 2023년 3월 22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완료보고와 완료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1항에서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20년 체육시설인 ○○○ 1면을 우선 발주하고 2022년 5월 13일

공사 준공하였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및 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준공에 따른 공부정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4.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운영상황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고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및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에서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사용허가) 제1항에서 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항

에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의 준공 시 확정측량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군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과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5.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 수립 지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고성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1. 공익정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22년 5월 10일 『고성군 ○○○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을 부군수 전결로 결재 방침을 받아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2022년 9월 의회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6. 하자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과에서는 2022. 5. 13. ○○○ 조성공사 준공검사하고 2023. 1월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없음”으로 보고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와 현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감사기간 중 현장에 대한 정리는 완료하였으나 하자(일부보수)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22일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당초 ○○○ 2면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1면을 우선 시공하고 미착공한 부지의 현장 폐기물 및 잔여 건설자재의 방치를 가리기 위해 EGI 웬스를 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시설의 미관을 더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덧붙여 고성군 ○○○은 97석의 관람석을 설치하였으며 1루수와 3루수측에 더그아웃을 설치하면서 타석 홈 플레이트의 시야를 가려 관람석의 일부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시설의 보완 및 위치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2022년 5월 준공한 이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각종 행정절차를 하지 않은 이유로 '22년 5월 ○○○ 1면과 건축물 4동을 부분 준공하였고 나머지 ○○○ 1면 및 건축물 3동은 '23년 착공하여 '24년 준공 완료 후 최종 준공처리할 계획이었으며, '24년 준공 완료 후 일괄 확정측량 실시 및 공부정리를 할 계획이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운영·관리 방안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초 계획은 7개월 운영을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운영 중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야구협회에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야구스포츠클럽의 등록과 새롭게 시행되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위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방침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2023년 1월 야구스포츠클럽이 등록되었기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위탁방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운영방법을 결정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 시설을 계획과 달리 1면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과 고성군계획시설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가 어려울 것이 확정적으로 판단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변경 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포츠클럽법은 2021. 6. 15. 제정 되었으며 준공은 2022. 5월로 관리방안 방침 시에 법은 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7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었음에도 2023. 3.월까지 운영방법을 결정하지 않았고 야구협회의 야구스포츠클럽 등록이 되었으므로 위탁방안 검토가 끝나면 운영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야구협회를 염두에 둔 답변으로 공정성을 결여한 이와 같은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고성군 계획시설인 ○○○ 준공이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감독책임자 ○○○○○과 지방○○○○○ ○○○, 실무책임자 지방○○○○○ ○○○, 실무담당자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고, 2022. 5. 13. 공사 준공 이후 정책결정 사항인 관리 운영계획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책임을 물어 감독책임자 지방○○○○○ ○○○(현 ○○○면), 실무책임자 지방○○○○○ ○○○, 실무담당자 지방○○○○○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훈계)

② ○○○ 시설물 중 휨스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성과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하시고 또한 하자 및 파손물은 적의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설결정 변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9】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고성 ○○○○ ○○○시설 건립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 9. 15. (주)○○건설 대표 ○○○과
도금액 1,528백만 원에 ‘고성 ○○○○ ○○○시설 건립사업’을 계약하고 같은 해
2. 15. 착공하여 같은 해 8. 13. 준공하였다.

[표 1] 고성 ○○○○ ○○○시설 건립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실시설계 용역	2020.11.13.	고성읍 ○○리 ○○○번지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64	64	-	2020.11.18. ~ 2021. 8. 6.	○○○○○사무소 대표 ○○○	100%
○○○○ ○○○시설 건립사업	2021. 9.15.		○○○ ○○○○ 건립사업 1식	1,685	1,528	157	2021. 9.23. ~ 2022. 9.29.	(주)○○건설 대표 ○○○	100%
구조감리 용역	2022. 2.25.		구조감리용역 1식	9	9	-	2022. 2.25. ~ 2022. 9.27.	(주)○○○○엔지니어링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에어돔 기초 콘크리트 압축강도 임의 변경 시공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7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 ○○○○ ○○○시설 건립사업’의 기초 콘크리트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변경하는 등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기초 및 벽체 콘크리트타설 감독업무를 하면서 콘크리트의 기준강도를 변경하는 등의 구조 안전과 관련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콘크리트 기준강도 저하에 대한 당초 구조설계자의 검토 의견을 조회하여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¹⁾ 이상 시공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당초 구조설계자의 의견 조회 없이 임의로 콘크리트 기준강도를 기존 30Mpa(메가파스칼)에서 24Mpa로 조정하여 시공하였고 에어돔 앵커의 인발테스트 및 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구조 안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1) 건축설계용역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에서 따르면 구조계산서는 물품의 제작·설치 업체인 ○○○○(○○○○○○○○○○)사에서 검토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구조계산서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30Mpa로 제시되어 있음

3.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반시설²⁾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에 따르면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4항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이미 결정된 고성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토지이용계획 등 부지면적과 세부 시설의 면적, 건축물 연면적 및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1. 9. 23. ○○○○ 상부에 ○○○ 시설인 에어돔을 설치하는 공사감독업무를 하면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 군계획시설 부지 외에 공작물 설치, 시설물의 면적, 높이 변경 및 편입 용지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요인이 사전에 확인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없이 착공하여 2022. 9. 29.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등 7개 공공시설

4. 방수층 시공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 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에 따르면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1-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고 방수 공종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 ○○○○ ○○○시설 건립사업’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하면서 ○○○○ 출입구 상부의 방수공사가 난간벽 치켜 올림부 및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높이로 시공하여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는지 시공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주)○○건설 대표 ○○○이 방수성능이 확보되지 않게 배수구 높이에도 못 미치는 난간벽 방수를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기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설계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공급 실정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자 및 구조감리자와 협의하여 구조물 기초에 주로 사용되는 규격으로 변경하였으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별도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편입된 학교용지는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개인 용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청으로 편입한 사항으로 그 면적이 경미하고 주요 구조물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방수층 시공 부적정 사항은 방수공사에 시공 대한 개념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부적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방수 기준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토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현 ○○○○○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 책임자 지방 ○○○○○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과 지방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방수공사가 관련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0】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고성읍 ○○○○○ 개보수사업 설계용역 발주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2. 25. (주)○○엔지니어링 대표 ○○○과 도금액 19백만 원에 ‘고성읍 ○○○○○ 개보수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13.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 2. 8. ○○○○○건설유한회사 대표 ○○○와 도금액 102백만 원에 ○○○○○ 개보수사업을 계약하여 2021. 8. 13. 준공하였다.

[표 1] 고성읍 ○○○○○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실시설계 용역	2020. 2.25.	고성읍 ○○리 ○○○번지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19	19	-	2020. 2.26. ~ 2020.12.13.	(주)○○엔지니어링 대표 ○○	100%
○○○○○ 개보수사업	2021. 2. 8.		○○○○○ 개보수 1식	692	102	590	2021. 2. 15. ~ 2021. 8.13	○○○○○건설 유한회사 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실시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고성군 건축 조례」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에 따르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건축허가권자인 고성군 ○○○○○과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0. 1. 22. ‘고성읍 ○○○○○ 개보수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의 막구조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자격 적합 여부의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격이 없는 (주)○○엔지니어링 대표 ○○○

을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의 막구조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고성군수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허가권자인 고성군 ○○○○과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공용건축물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2021. 7.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건축 협의를 하여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및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누락 하였다.

3. 특수구조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¹⁾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인 ○○○○○ 개보수 사업을 착공하기 전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허가권자인 고성군 ○○○○과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1. 2. 15. ‘고성읍 ○○○○○ 개보수 사업’을 착수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 규정에 따라 나항.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항.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제1호 막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0.9M이고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막구조로서 「건축법」에 따른 특수 구조에 해당하는데도 고성군 ○○○○과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요구 및 절차의 이행 없이 착공하였다.

4. 지반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 및 지반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5조(공사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지반 및 지질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읍 ○○○○○ 개보수사업’의 실시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할 때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및 지질상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착수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이에 대한 사항 등을 현지 조사하고 구조계산에 따른 설계지내력이 현장에서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1. 2. 15. ‘고성읍 ○○○○○ 개보수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업무를 하면서 착공 전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자가 실시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제시된 지내력인 96kn/m²가 현장에서 충족되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착공하도록 관리·감독 해야하는데도 시공자인 ○○○○○건설 유한회사 대표 ○○○가 착공 전 지내력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공사감독자는 시정명령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5. 건설공사 하자담보기간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별표 4에 따르면 대형공공성 건축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은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 ○○○○ ○○○시설 건립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검토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공종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물이 대형 공공성 건축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1. 8. 13. ‘고성읍 ○○○○○ 개보수 사업’의 준공서류 등을 검토 할 때에는 건설사업자가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토록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건설사업자인 ○○○○건설 유한회사 대표 ○○○가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3년(2021. 8. 13. ~ 2024. 8. 12.)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기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정보완 요구 없이 준공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고성읍 ○○○○○ 개보수사업’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공용건축물 협의한 사항,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누락, 지반조사 미 실시 및 건설공사 하자담보기간 검토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기존 시설의 교체사항으로 판단하여 「건축법」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업무처리가 부적정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수행지침을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현 ○○○○○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지방○○○○○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과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 공사감독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 3. 30. 주식회사○○ 대표 ○○○와 도금액 19백만 원에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을 계약하여 같은 해 3. 31. 착공하고 같은 해 6. 10. 준공하였다.

[표 1]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 ○○○○ 막구조물 설치사업	2022. 3.30.	고성읍 ○○리 ○○○-○○ 일원	막구조물 설치공사 1식	270	19	251	2022. 3. 31. ~ 2022. 6. 10.	주식회사 ○○ 대표 ○○○	10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기초공사 감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 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1-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공사감독을 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설계 시행 단계별로 감독하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의 기초부위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면서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대표 ○○○가 막구조물 콘크리트의 기초를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19mm 이형철근을 150mm(11열)¹⁾ 간격으로 적정하게 배근하도록 감독하고 검사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와 달리 철근의 간격을 약 250mm(7열) 간격으로 배근하여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하였다.

그리고 고성군 ○○○○과에서는 2023. 3. 17. 감사기간 중 기초공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을 지적받고 시공을 완료한 현황에 대한 기초부위의 구조안전성 재해석을 수행한 결과 건설사업자의 부실 공사에 따른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초의 단면 확대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11열(10.93개) = {1,800mm - (80mm×2)} ÷ 150mm

산출근거 : [기초의 단면 길이 - 기초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좌·우측면)] ÷ 철근의 배근간격

3. 미시공 건축자재(유로폼) 준공정산 미이행 등 준공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항,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 또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1-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통지를 받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 ○○○○ 내 막구조물 설치공사’의 기초설치 공사감독 및 검사 업무를 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및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2. 6. 10. ○○○○○ ○○○○ 내 막구조물 설치공사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 대표 ○○○가

기초공사에 레미콘 타설 시 유로폼을 설치하지 않고 기초부위 굴착면에 직접 레미콘을 타설 하였는데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는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독·검사하지 않아 유로폼 미설치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감액정산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196천 원 상당의 미시공 유로폼 공사비가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되었으나 2023. 3. 22.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 및 회수조치 하지 않았다.

[표 2] 미설치 유로폼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용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규격	단위	수량								
기초 설치	유로폼	m ²	80	27.5	2,197	2.3	181	24.5	1,957	0.7	59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 ○○○○ 내 막구조물 설치사업’의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하면서 기초공사 철근배근 감독 부적정 사항과 미시공 건축자재 준공정산 미이행 및 준공검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 부족과 구조안전성 및 자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성에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가 보강공사를 이행토록 시정조치하고 미사용 건축자재에 대한 정산 및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준공검사자의 건설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항을 감사 기간 내에 기초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즉시

수행하여 시공자에게 보강조치 요구하였던 점과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 등을 감안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지방○○○○○○○○(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책임자 ○○○○과 지방○○○○○○○○○○○○○○○○(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 ②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 또는 재시공(보강) 명령**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사용 건축자재에 대하여 지급한 **2,196천 원 상당의 공사비는 환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 ○○○○ 인프라구축사업 ○○○○ 건립공사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고성군(○○○○과)

조 치 기 관 고성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고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9. 25. (주)○○○○○사무소 대표 ○○○과 도급액 63백만 원에 ‘○○○○○○○○○ ○○○○ 인프라구축사업(○○○○○ 건립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2021. 12. 27. 완료하였고, 2022. 6. 10. (주)○○○○○건설 대표 ○○○과 도급액 2,097백만 원에 ○○○○ 건립공사를 계약하여 같은 해 6. 15. 착공하고 2023. 10. 16.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표 1] ○○○○○○○○ ○○○○ 인프라구축사업(○○○○○ 건립공사) 추진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기 간	계약상대자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0. 9. 25.	○○면 ○○리 ○○○번지 일원	실시설계용역 1식	63	63	-	2020. 10. 5. ~ 2021. 12. 27.	(주)○○○○○ 사무소 대표 ○○○	100%
인프라구축 사업(○○○○○ 건립공사)	2022. 6. 10.		주차장설치 2층(2층 3단), 1,682.71㎡ (3,365.42㎡)	2,882	2,097	785	2022. 6. 15. ~ 2023. 10. 16.	(주)○○○○○건설 대표 ○○○	30%

[출처 :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제한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 및 제43조(용역의 준공)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에서는 주차장 건립공사의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설계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준공 검사 전에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접도구역에서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성군 ○○○○과에서는 2020. 10. 5.부터 2021. 12. 27.까지 ‘○○○○ ○○○ ○○○○ 인프라구축사업(○○○○ 건립공사)’의 설계용역감독을 하면서 설계용역사업자인 (주)○○○○○사무소 대표 ○○○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내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배치하여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설계 용역감독자는 이에 대한 확인·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아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21. 12. 27. 용역준공검사자도 준공검사 시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아 접도구역에서 공작물이 배치된 부적정한 설계도서를 준공승인 하였고

2022. 3. 22. 감사일 현재 부적정한 설계도서대로 공사 중에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 ○○○○ 인프라구축사업(○○○○ 건립공사)’의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하면서 설계도서 검토를 부적정하게 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물이 접도구역 내에 설치되게 한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 부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 접도구역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에 도로가 지방도로로서의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사항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구역 변경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 등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과), 설계용역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설계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설계용역업자 (주)○○○○○사무소 대표 ○○○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